

Knock 군산
Knock

시민과 함께, 군산시의회

창간호
새만금관할권대응 특집



군산시의회
GUNSAN CITY COUNCIL



두드리면 열리는
시민을 향한 군산시의회의
열린 의정을 의미합니다.

발 행 처 : 군산시의회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전 화 : 063)450-5831

발 행 인 :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편 집 인 :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편 집 부 : 의회사무국 김주홍, 전양목, 김현정, 임수정, 김주향, 나영진, 박우람

발 행 일 : 2023년 12월

군산시의회 의정소식지



시민과 함께, 군산시의회





PARLIAMENTARY
POLITICS
NEWS

CONTENTS

의정활동

- 7 1. 발간사, 인사말
- 12 2. 의회조직 및 구성
- 18 3. 2022년 7월 ~ 2023년 6월 군산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 1) 의사일정
 - 2) 의정활동
 - (1) 의원발의조례안
 - (2) 5분발언
 - (3) 성명·건의·결의안
 - (4) 시정질문
 - 3) 봉사활동
 - 4) 전체 의원 현장 방문, 상임위원 현장 방문
 - 5) 기타의정활동 : 의회외교, 폭우피해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새만금특집

- 73 1. 새만금관할권 대응 (2022년 7월 ~ 2023년 12월)
 - 1) 총괄대응일지
 - 2) 주요활동
 - (1) 새만금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문
 - (2) 새만금 관할권 관련 칼럼
 - (3)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대응 보도자료(2023년)
 - (4) 새만금 대응 사진첩
- 165 2. [시민특집]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
 - 1) [홍보기자단] 군산시의회에 보내는 응원메시지
 - 2) [홍보기자단]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ㅋ 뉴스
 - 3) [홍보기자단]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에서 군산시의회의 범시민서명운동
 - 4) [홍보기자단] 워크숍 참석 후기
 - 5)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새만금 대응 시민 논평

의정활동

1. 발간사
2. 의회조직 및 구성
3. 2022년 7월 ~ 2023년 6월 군산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 1) 의사일정
- 2) 의정활동
 - (1) 의원발의조례안
 - (2) 5분발언
 - (3) 성명·건의·결의안
 - (4) 시정질문
- 3) 봉사활동
- 4) 전체 의원 현장 방문, 상임위별 현장 방문
- 5) 기타의정활동 : 의회외교, 폭우피해 기자회견, 인사청문회

추진사항 결산(2022.7.~2023.6.)



회기일정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총 **124**일



의안처리

207건



조례안

110건 중

의원발의 **45**건



건의문
결의문
시정질문
5분발언

102건



기타

132건

간담회 및 현장방문

★ 8대 군산시의회와 비교 의원발의 32.35%(작년 34건) 증가
건의안, 결의안, 시정질문, 5분발언 27.5%(작년 80건) 증가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제9대 군산시의회의 지난 새만금 관할권 의정활동 특집을 담은 의정소식지 「Knock Knock 군산」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제9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제9대 의회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로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민의 대변인 역할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관할권 등 시정현안에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고자 「Knock Knock 군산」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23명 의원들 모두 지역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고, 시민 생활 속에서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과 지역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촉구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번 창간하는 의정소식지는 “새만금 특집”으로 지난 한 해동안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구역 사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의회 본연의 업무인 의정의 주요 안건 처리 등 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용 중심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함축적으로 편집 제작되어 시민들이 의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앞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주된 역할인 군산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 소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군산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우민**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창호입니다!

군산시의회의 소식을 전달하는 <Knock Knock 군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9대 군산시의회는 개원 이래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이뤄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많은 변화속에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군산시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의회의 책임성 강화와 자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Knock Knock 군산> 발간은 그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군산시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열린 창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의 문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도 23명의 군산시의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창호**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광일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 의정활동을 담은 <Knock Knock 군산>의 발간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산시의회 23명 의원들 모두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생활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Knock Knock 군산>은 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듣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장 **박 광 일**



사랑하는 군산시민여러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군산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 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번 창간하는 군산시의회 의회소식지 「Knock Knock 군산」은 그간 우리 23명의 군산시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의 면면과 함께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시민 여러분과 군산 새만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 의회소식지 「Knock Knock 군산」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이 군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더 나은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운 날씨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나종대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옥도면

나 선거구 (해신 · 소룡 · 미성 · 신평 · 삼학동)



서은식



설경민



우종삼

마 선거구 (월명 · 흥남동)



박광일



송미숙

아 선거구 (나운3동)



김우민



서동완

가 선거구 (옥구읍 · 옥산 · 회현 · 옥도 · 옥서면)



김경구



서동수

사 선거구 (나운1 · 나운2동)



김경식



지해춘



한경봉



다 선거구
(임피 · 서수 · 대야 · 개정 · 성산 · 나포면)



김영일 이한세

라 선거구
(중앙 · 조촌 · 경암 · 구암 · 개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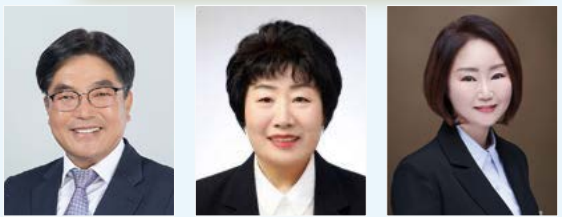
김영란 김영자 박경태

바 선거구
(수송동)



나종대 윤신애 최창호

비례대표



양세용 윤세자 이연화





2. 의회 조직 및 구성

군산시의회는 의장,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의회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 등 3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 윤리 등 2개 상설 특별위원회와 시의회사무처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 제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 원구성

의장단

의장단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 장		부 의 장	
	김영일 (다 선거구·임파·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00		김우민 (아 선거구 - 나운3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02

상임위원회

군산시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각종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3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위 원 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7명)	최창호	윤세자	서은식, 김영자, 박경태, 윤신애, 지해춘
행정복지위원회(11명)	박광일	윤신애	서은식, 우종삼, 김영란, 송미숙, 최창호, 김경식, 김우민, 서동완, 이연화
경제건설위원회(11명)	나종대	박경태	김경구, 서동수, 설경민, 이한세, 김영자, 지해춘, 한경봉, 양세용, 윤세자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 전체의 전반적인 의사일정 조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와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의장단, 교섭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최창호 (바 선거구-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8		윤세자 (비례대표) 국민의힘 063)450-5738
위원			
	서은식 (나 선거구-해신·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9		김영자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2
	박경태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1		윤신애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1
	지해춘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7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보, 감사, 자치행정, 문화관광, 복지환경, 보건, 시설 관리, 읍면동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 및 회계를 비롯한 시책사업과 기획분야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박광일 (마 선거구 - 월명·흥남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0		윤신애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1
위원			
	서은식 (나 선거구 - 해산·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9		우종삼 (나 선거구 - 해산·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7
	김영란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3		송미숙 (마 선거구 - 월명·흥남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6
	최창호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8		김경식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5
	김우민 (아 선거구 - 나운3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02		서동완 (아 선거구 - 나운3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14
	이연화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063)450-5712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항만, 안전건설, 농업, 수도, 차량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창출, 도시계획수립, 도시안전 및 재난관리, 공원녹지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나종대 (바 선거구 - 수송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01		박경태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1
위원			
	김경구 (가 선거구 - 옥구·옥산·회현·옥도·옥서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34		서동수 (가 선거구 - 옥구·옥산·회현·옥도·옥서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36
	설경민 (나 선거구 - 해신·소룡·미성·신평·삼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3		이한세 (다 선거구 - 임파·서수·대야·개정·성산·나포면) 더불어민주당 063)450-5735
	김영자 (라 선거구 - 조촌·경암·구암·개정·중앙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2		지해춘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7
	한경봉 (사 선거구 - 나운1·나운2동) 더불어민주당 063)450-5739		양세용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063)450-5740
	윤세자 (비례대표) 국민의힘 063)450-5738		



3. 2022년 7월 ~ 2023년 6월 군산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1) 의사일정

- 2023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

회기별	기 간	회의일수	주 요 내 용
제252회 임시회	1. 12.(목) ~ 1. 17.(화)	6	○ 부의안건 처리 ※ 설 연휴 : 1.21.~1.24. ※ 집행부(市) 신년인사회 1월~2월중
제253회 임시회	2. 14.(화) ~ 2. 23.(목)	10	○ 부의안건 처리 ○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54회 임시회	3. 14.(화) ~ 3. 23.(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빙기)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5.31.까지 의회에 결산서 등 제출
제255회 임시회	4. 20.(목) ~ 4. 25.(화)	6	○ 부의안건 처리
제256회 제1차 정례회	6. 14.(수) ~ 6. 28.(수)	15	○ 부의안건 처리 ○ 2022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57회 임시회	7. 5.(수) ~ 7. 7.(금)	3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제258회 임시회	8. 29.(화) ~ 9. 7.(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추석연휴 : 9.28. 10.1.
제259회 임시회	10. 24.(화) ~ 11. 2.(목)	10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2023 업무실적 및 2024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1. 13.(월) ~ 12. 20.(수)	38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9일간) ○ 결산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 회의일수: 9회 / 111일(정례회 55일, 임시회 56일)



2) 의정활동

(1) 의원발의조례안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1	제248회 임시회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식 의원)
2	제249회 임시회	군산시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민 의원 (윤신애 의원, 지해춘 의원)
3	제249회 임시회	군산시 소상공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식 의원 (김경구 의원, 한경봉 의원, 지해춘 의원, 서은식 의원, 박경태 의원, 이연화 의원)
4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민 의원
5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 (김영란 의원)
6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란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서동완 의원, 이연화 의원)
7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경봉 의원 (나종대 의원, 박광일 의원, 김경식 의원, 설경민 의원)
8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윤세자 의원, 양세용 의원, 송미숙 의원, 한경봉 의원)
9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윤세자 의원, 양세용 의원, 송미숙 의원, 한경봉 의원)
10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지해춘 의원, 박경태 의원, 이한세 의원, 윤세자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11	제250회 임시회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김영자 의원, 양세용 의원)
12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김영란 의원 (이한세 의원, 박경태 의원, 한경봉 의원, 나종대 의원, 서은식 의원, 송미숙 의원)
13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완 의원 (서은식 의원, 김영란 의원, 이연화 의원, 윤세자 의원)
14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 (송미숙 의원, 윤신애 의원, 서동완 의원, 이연화 의원, 김영란 의원, 박광일 의원)
15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박광일 의원, 윤신애 의원, 서은식 의원, 김영란 의원, 이연화 의원)
16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나종대 의원, 박경태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자 의원, 지해춘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17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서동완 의원, 나종대 의원, 박경태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김영자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18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나종대 의원, 설경민 의원, 한경봉 의원)
19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자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20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박경태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양세용 의원, 나종대 의원, 김경구 의원)
21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나종대 의원, 설경민 의원, 김경구 의원, 윤세자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22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윤세자 의원, 나종대 의원, 설경민 의원, 양세용 의원)
23	제252회 임시회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윤신애 의원
24	제252회 임시회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서은식 의원
25	제253회 임시회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영란 의원 (김영일 의원, 송미숙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의원)
26	제253회 임시회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
27	제253회 임시회	군산새만금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신애 의원 (나종대 의원, 서동수 의원, 박광일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28	제254회 임시회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연화 의원
29	제254회 임시회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박광일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30	제254회 임시회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은식 의원
31	제254회 임시회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
32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란 의원 (김경구 의원, 김영일 의원, 박광일 의원, 서동완 의원, 송미숙 의원)
33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우민 의원 (박광일 의원, 김영일 의원)
34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박광일 의원)
35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박경태 의원 (김영란 의원, 송미숙 의원 윤신애 의원, 이연화 의원 박광일 의원, 서은식 의원 최창호 의원, 지해춘 의원)
36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 (박광일 의원)
37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송미숙 의원 (김영란 의원, 박광일 의원, 최창호 의원, 지해춘 의원)
38	제255회 임시회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김경구 의원 (김경식 의원, 김영란 의원, 송미숙 의원, 한경봉 의원, 박광일 의원)
39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한경봉 의원
40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 (김영일 의원)



연번	회기	의안명	발의의원
41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일괄 개정조례안	 송미숙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일 의원, 이연화 의원)
42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송미숙 의원 (김영일 의원, 박광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영란 의원)
43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화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44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안	 한경봉 의원
45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군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

(2) 5분발언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1	제247회 임시회 2차	의회사무국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한경봉 의원
2	제248회 임시회 1차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 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	 한경봉 의원
3	제248회 임시회 2차	문화예술의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송미숙 의원
4	제249회 임시회 1차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	 서은식 의원
5	제249회 임시회 1차	서해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자	 박광일 의원
6	제249회 임시회 1차	반복적인 집중호우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입니다	 김영자 의원
7	제249회 임시회 2차	군산시민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세웁시다	 송미숙 의원
8	제249회 임시회 2차	대야역 광장조성사업에 시민혈세 40억원을 투입하지 마라	 한경봉 의원
9	제249회 임시회 2차	월명산 전망대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서동완 의원
10	제250회 임시회 1차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급 권고	 윤신애 의원
11	제250회 임시회 1차	지역기업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해춘 의원
12	제250회 임시회 1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 필요	 김영자 의원
13	제250회 임시회 1차	쌀값 하락에 따른 자체 대책을 마련하라	 김경구 의원
14	제250회 임시회 2차	명분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해결 촉구	 한경봉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15	제250회 임시회 2차	군산권역 해양쓰레기 재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하자	 서은식 의원
16	제250회 임시회 2차	군산시 홍어,대구 특화 가공 및 브랜드화 추진	 양세용 의원
17	제250회 임시회 2차	도농 통합의 정신을 조직개편으로 의지를 보여라	 김경구 의원
18	제250회 임시회 2차	콩당보리 축제 발전 방향	 설경민 의원
19	제251회 제2차정례회 1차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윤신애 의원
20	제251회 제2차정례회 1차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과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서비스 마련하자	 최창호 의원
21	제251회 제2차정례회 1차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관련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하라	 한경봉 의원
22	제251회 제2차정례회 1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수집노인을 위한 폭넓은 복지 정책 마련하자	 송미숙 의원
23	제251회 제2차정례회 1차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으로 미래지향 장묘문화 정립!	 지해춘 의원
24	제251회 제2차정례회 1차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박광일 의원
25	제251회 제2차정례회 2차	군산시를 동물복지 도시로 만들자	 한경봉 의원
26	제251회 제2차정례회 2차	관내 업체 계약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김영자 의원
27	제251회 제2차정례회 3차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맞이하여 2023년을 군산 방문의 해로 지정하자!	 윤신애 의원
28	제251회 제2차정례회 4차	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한경봉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29	제251회 제2차정례회 5차	외국인 근로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하자	 김경식 의원
30	제251회 제2차정례회 5차	군산시 축제에 대한 제언	 서은식 의원
31	제251회 제2차정례회 5차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한경봉 의원
32	제251회 제2차정례회 5차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김영자 의원
33	제251회 제2차정례회 5차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농민과 시민 복리정책을 집행하라	 김경구 의원
34	제252회 임시회 1차	시민들의 생활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해 도로 보수 전문 인력으로 민원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라	 김우민 의원
35	제252회 임시회 1차	가로수 관리 잘해서 도시에 생명의 길을 열자	 한경봉 의원
36	제252회 임시회 2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친환경 인증제(G-SEED) 패러다임에 걸맞은 행정력을 갖추자	 한경봉 의원
37	제252회 임시회 2차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부재	 서동완 의원
38	제253회 임시회 1차	통매산, 군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	 김영란 의원
39	제253회 임시회 1차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경봉 의원
40	제253회 임시회 1차	군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김경식 의원
41	제253회 임시회 1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자	 서은식 의원
42	제253회 임시회 1차	어린이의 꿈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과학관 건립 추진 제안	 윤신애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43	제253회 임시회 2차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자	 박경태 의원
44	제253회 임시회 2차	난방비 폭탄에 따른 에너지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자	 윤신애 의원
45	제253회 임시회 2차	군산시는 졸속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주차장 확보와 군산 가족센터 입지를 재검토하라)	 한경봉 의원
46	제253회 임시회 2차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라!	 송미숙 의원
47	제253회 임시회 2차	붕따우시와의 인력정보 플랫폼구축 제언	 이연화 의원
48	제254회 임시회 1차	군산시 다문화 영유아 언어 교육 밀착 지원	 김영자 의원
49	제254회 임시회 1차	군산시는 관광정책을 개선하라!	 한경봉 의원
50	제254회 임시회 1차	신치항 혼잡 등 이용불편과 안전문제를 해결하라	 윤세자 의원
51	제254회 임시회 1차	군산시 영아전담 아동복지시설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자	 김영란 의원
52	제254회 임시회 2차	군산시 보건소는 선진 보건행정을 실시하라	 한경봉 의원
53	제254회 임시회 2차	군산시는 민간위탁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윤신애 의원
54	제254회 임시회 2차	군산시는 10년 된 근대역사공간 평가 및 체계적인 3.5만세운동 계승 방안을 마련하라!	 서은식 의원
55	제254회 임시회 2차	태양광 발전수익을 기업유치에 활용하라!	 설경민 의원
56	제254회 임시회 2차	군산 바다의 수산자원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과 “관리수면”을 지정하자	 김경구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57	제255회 임시회 1차	군산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 정책 추진하자	 지해춘 의원
58	제255회 임시회 1차	수송동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대처할 방안 찾아야	 윤신애 의원
59	제255회 임시회 2차	낙영당을 군산의 독립 역사 브랜드로 재구성하여 후세에 이어줄 근대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송미숙 의원
60	제255회 임시회 2차	함께하는 삶,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도입하자	 김영자 의원
61	제255회 임시회 2차	군산시 특산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경봉 의원
62	제255회 임시회 2차	군산시는 성산면 대평세라믹스 우드칩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다시 불허하라!	 이한세 의원
63	제255회 임시회 2차	군산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대야역까지 연장하자	 김영란 의원
64	제255회 임시회 2차	산북동~미성로 도로확포장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교통혼잡도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서동완 의원
65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군산시는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 수산물축제를 재추진하라	 김영란 의원
66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군산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한경봉 의원
67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박경태 의원
68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군산남중학교 성급한 학교 이전 신설을 반대한다	 우종삼 의원
69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군산시 한심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	 한경봉 의원
70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군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무임 교통카드 발급 제한	 김경식 의원



연번	회기	발언내용	발의의원
71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김영자 의원
72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군산시 존립위기 대응 인구정책 어디로 가고있나	 이연화 의원
73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군산시는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설경민 의원
74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스토리텔링 관광자원 발굴 대책 수립	 서동완 의원

(3) 성명·건의·결의안



제249회 임시회

이한세 의원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러-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차질 등의 여파로 밥상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값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2년부터 쌀 재배면적은 1.5%씩 감소했지만 1인당 쌀 연간 소비량은 2011년 71.2kg에서 작년에 56.9kg으로 소비 감소폭이 연평균 2.2%로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더 큰 원인과 정부 정책의 실기와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쌀값을 내려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올랐을 뿐 아니라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시장격리를 제때 하지 않고 최저가 역공매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햅쌀의 출하가 시작되면 작년 쌀을 헐값으로 밀어내기하는 상황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햅쌀 수확 전에 추가 시장격리와 공공비축량 확대 등 신속하게 쌀값 안정책을 제시할 것과 영농자재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제249회 임시회

윤신애 의원

「군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건의안」

군산시는 지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국비 31억원 지원을 토대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으며, 4년이 지난 현재 누적판매액 1조7천억 원으로 어려워진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판매율 1위를 달성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하는 등 지역 경제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기재부의 '23년 지역화폐사업예산 전액 삭감' 소식은 그간 국비 1,046억원을 지원받아 1조7천억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바,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장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2023년 지역화폐 사업예산 지속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제250회 임시회

송미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2일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 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 개로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 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근무하는데 비해, 월 27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여 1925억 원이 줄고 6만 1131개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용돈별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일이므로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노인분들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할 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의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250회 임시회

김영란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7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안은 청부입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국가 성평등 추진 체계를 와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 정책 생태계가 와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가부는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전담부서로서 그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므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서동완 의원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도 크지만, 전주시와 군산시의 문화향유 격차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일 뿐 아니라 전라북도는 2022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47억, 전주세계소리축제 24억 총 7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거리상의 문제로 쉽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을 810억(운영비 별도), 익산시는 2015년 812억 임대형 민자사업(운영비 별도)으로 익산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비가 매년 약 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전주시립예술단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덕진예술회관’이 있음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대관하여 전주시는 예술회관 건립과 운영 부담을 줄이지만 군산을 비롯한 문화향유지수가 전국평균 대비 마이너스인 고창, 남원, 정읍, 부안, 임실, 진안 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주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군산에서 맘껏 관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서은식 의원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최근 조선업의 글로벌 발주량 및 수주량 증가에 따라 조선업 생산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조선업 호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내 조선산업 시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선업 생산 인력양성 및 공급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가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기획재정부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질타했다.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의 혁신과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인력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60억 원 삭감 예산을 120억 원으로 증액하고 ‘조선 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 허브사업’ 전액 삭감한 80억 원을 애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대로 전액 원상회복하여 확보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김우민 의원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 철회 결의안」

지난 2018년 국내 유명기업의 침대 매트리스에 포함된 음이온 물질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인 100Bq/m³ 보다 월등히 높은 2000Bq/m³이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전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심각한 위험 물질로 세계 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법에 따라 라돈을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로 분류하고 4년째 천안에 쌓여있던 라돈 침대 560t 약 11만 5천 개를 군산시에 소각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군산시 소재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2021년 5월 시설 연구용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소각시설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처리를 위한 시설 증설과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560톤의 거대한 물량을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지역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하며 정부는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조속히 철회할 것과 군산시를 비롯한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전주시, 논산시 지역 등 광범위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소각 장소를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송미숙 의원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군산항은 지난 1899년 개항한 무역항으로, 1990년대 대중국 무역의 관문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대표 항만으로서의 명성은 잃은 지 오래라며 군산항이 기본적인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담보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심각한 토사매몰이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책임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준설토 투기장 부족도 당장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으로,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수토용량이 초과돼 더 이상 투기가 어렵다며 새만금산단은 수토여건 변화로 오는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완료 될 때까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군산항 물동량 감소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니라, 바닷길이 토사로 막혀 배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으로 정부가 운영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 체계를 구축해 본래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52회 임시회

서은식 의원

「군산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5년간 해신동 20%, 월명동 24%의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453명이 다니던 군산 동산중학교까지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은 ‘쇠퇴’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며 군산 동산중학교가 지곡동으로 이전하면 2024년부터 금동에 있는 옛 군산 동산중학교 건물이 텅 비게 될 뿐 아니라 이미 활력을 잃은 해신동 등 원도심 일대는 더욱 쇠퇴해 갈 것이라고 자명했다.

또한, 군산 동산중학교를 둘러싼 신흥동·금동 지역은 1백 년 전부터 군산을 대표하는 삶터이자 배움터 중 한 곳으로 개항장, 식민지, 피란민, 근대화의 자취가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학교 건물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군산시·시의회, 관계기관 등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52회 임시회

윤신애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건의안」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를 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10개 기관이 참여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2020년 11월 SK 투자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우리 군산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그린에너지 대 전환을 이뤄내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역 때문에 SK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발이 묶여 있어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 되지 않으면 투자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수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추진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즉각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이행할 수 없다면 발전사업권(300MW)을 지금 즉시 양도함은 물론 새만금 개발청은 업무협약상 역할에 따라 한수원의 역할이행을 촉구하라고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즉각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제252회 임시회

최창호 의원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1991년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현재,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고 권역별·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상화된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아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정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했으며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함은 물론, 김제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제252회 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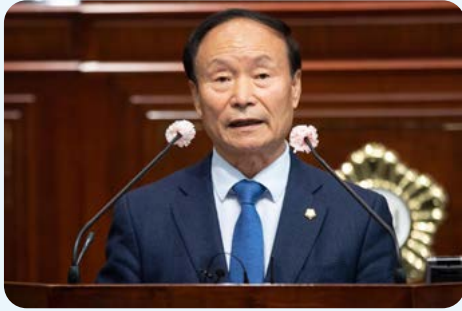
김우민 의원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으로 1991년 11월에 착공해 약 18년 5개월 만에 건설하였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결정,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며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명칭을 새만금신항에서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253회 임시회

김경구 의원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퇴출 반대 건의안」

쌀값 제값 받기를 위해서 2005년부터 군산에서 본격 재배 시작한 품종이 ‘신동진’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여 전북지역은 물론 충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신동진벼를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면적 1위 품종이 되었는데 정부보급종에서 전면 퇴출이라는 정부의 쌀 정책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이번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일본은 1956년 육성된 ‘고시히까리’를 여전히 국가 자존심으로 여기며 자랑으로 삼고 있고 그들은 병이 나고 쓰러지고 소출이 많이 나도 품종을 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품종 다양화, 유사 시 우수 품종 유지 측면에서 정부보급종에서의 신동진벼 퇴출 결정을 재고하고 불합리한 퇴출 기준을 재검토 ▲정부보급종 검토에 대하여 품종별 퇴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 수요의 다양성을 수렴하며 쌀 재고량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정책을 발굴할 것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제253회 임시회

한경봉 의원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각시설의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국민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 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군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2022년 8월 31일 적합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민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환경피해, 시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니 더 이상 군산 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환경청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254회 임시회

한경봉 의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08년 시작된 ‘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우리는 결국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2년 8월말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소가 문을 닫았고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도 250여 개소의 어린이집 중 100여 개소가 문을 닫아 153개소만이 현재 운영 중이라며 줄줄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 ‘보육난민’을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 ‘실직의 삼중고’를 토로하며, 교육 현장은 ‘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 수립 ▲원장과 보육 교사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 ▲현재까지 어렵게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255회 임시회

송미숙 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는 여름부터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안전 기준 이하로 희석시켜 205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했다며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 동중국해를 따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안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에 유입되게 된다며서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90 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유전자 변형, 발암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특히 스트론튬-90은 체내에서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뼈 등에 축적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유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철회 ▲일본 정부의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실시 및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 재수립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강구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수입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수산업 지원 등의 대책의 조속한 마련 등 강력한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제255회 임시회

한경봉 의원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 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며 그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에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항만 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온 탓으로 군산항은 「항만법」 상 국가무역항이며 정부와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북경제를 이끌고 국제복합 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 확대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 조속히 확보 ▲군산항이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제255회 임시회

서은식 의원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제시 촉구 성명서」

지난해 8월 전라북도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함께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며 12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시·군의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사이, 보다 못한 3개 시·군의 시민들이 지난 4월 3일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 추진위원회’ 발족·전라북도 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전라북도는 시민과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여 본격적인 3개 시·군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3개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의 분명한 청사진 제시 ▲더욱 심도있고 구체적인 확실한 통합방안 소신있게 추진 ▲새만금이 갈등의 땅이 아닌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희망의 땅이라는 인식을 되새길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255회 임시회

서동완 의원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성명서」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군산만의 특색있는 지역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의 ‘온 마을 온 아이’를 위한 군산미래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센터 구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협력지구사업은 민선7기를 시작하며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군산시, 교육청, 민간전문가, 마을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군산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며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고 열띤 토론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중간지원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2018년 교육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군산시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군산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특구 업무협약을 체결, 2020년 군산 교육협력지구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2021년 연구용역에서는 교육중간지원조직 즉 ‘군산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와 지금까지 추진되던 교육협력지구 사업 적극 지원, ▲학생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군산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촉구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윤신애 의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정부가 세계의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원 지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개시하여 경북(포항), 울산, 전북(군산), 충북(오창)이 경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북의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현지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이 가능하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라며 신항만과 공항, 철도, 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는 물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의 세제 혜택,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등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는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특화단지 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및 세계 시장을 겨냥한 국제적 입지를 완벽하게 갖춘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서은식 의원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

군산시 해망로 583에 위치한 (구)군산세무서(이하 청사라 한다)는 1990년에 준공되어 30여년 동안 청사로 사용하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신축 이전하였다며 청사 해당 부지는 5,289㎡,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 규모로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청사와 부지는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폐가처럼 4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국유지 개발은 2019년 건물개발에서 토지개발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여 그 활용방안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외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 부지와 청사의 활용 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방치된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한경봉 의원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군산시에는 이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환경부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업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등 총 5개의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중인 국민산업이 동일 매립장 내에 추가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2020년 12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며 두 차례에 걸친 군산시의 부적정 의견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은 결국 지난해 8월 말 국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를 함으로써 국민산업에게 3년 이내에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산업은 금년 1월 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통합관리사업장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9일 군산시에 해당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군산시에서 2020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만큼 현재의 대기환경이 악조건인 상황과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과정에서 필연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됨을 표명한 바 있어 주민 생활환경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군산시는 국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것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국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변 환경피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우종삼 의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윤석열 정부가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당선 후에도 새만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했으나 취임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에 대하여 아무런 방향 제시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만 집중하여 군산, 김제, 부안 간의 지역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김제시는 표면적으로는 전북발전을 운운하고 이면적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 등에 대한 ‘선 관할권 인정’만을 주장하며 군산시와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1호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새만금 메가 시티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행 ▲전라북도는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김제시의 선 관할권 인정 주장을 중재하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철회시키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 단체 구성 협의를 위한 대등하고 정확한 명분 제시 ▲김제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통합에 동참할 것을 건의했다.

(4) 시정질문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한경봉 의원



1. 시민공모펀드 설계부터 부실
2.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적격, 공석 및 이사회 파행
3. 제강슬래그로의 설계 변경에 따른 환경문제 우려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
4.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 자체의 위법성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문제점 지적과 새만금농생명단지 활용한 새로운 꽃문화축제 제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김경구 의원



1.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제척
2. 새만금농생명단지 활용과 꽃문화축제 연계 방안
3. 농업기술센터 과 증설과 직원 증원 계획

옥회천 정비사업 관련

제251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한경봉 의원



1. 영농손실보상건 중, 중복하여 보상한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가?
2. 당초편입토지사정조서(계획도면)에는 없는데 편입보상된 토지의 이유는 무엇인가?
3. 등기부상편입토지중 보상면적과 다르게 등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4. 보상후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데 이유는?
5. 보상후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라북도, 군산시로 각각 등기된 이유는?

경암동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사업 문제와 대책 관련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한경봉 의원



1. 경암동사업부지내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가족센터 신축의 종합적 문제점
2. 두 신축사업 입지선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성 등)
3. 두 신축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주차난 등 문제와 대책
4. 완공된 로컬푸드복합센터 전용으로 사용 검토 및 군산가족센터의 적정 입지 재선정 검토 등 향후 대책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관련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서동완 의원



1. 산북중~미성로 도로확포장 추진이유
2. 2012년 기획부동산 50억 사기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3. 2014년, 201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산북중~미성로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가?
4. 의회에서 제시한 유원아파트에서 4토지로 이어지는 종로활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무엇인가?

3) 봉사활동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2년 11월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 빵빵, 사랑 빵빵’ 달콤한 빵 봉사 활동을 펼쳤다.

군산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실천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일 파티쉐’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을 통해 군산 나눔 문화에 앞장섰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정성껏 밀가루 반죽과 빵틀에 반죽 넣기, 오븐에 빵 굽기 등을 반복하며 빵 만들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빵을 정성스레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빵은 관내 아동 양육시설 일맥원 외 2개소와 그룹홈 평화의 집 외 7개소에 배달돼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로하였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 더불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시민 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4) 전체 의원 현장 방문

2023. 1. 11. 군산새만금신항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군산새만금신항 현장을 방문했다.

시의회는 새만금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대규모의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1991년 첫 삽을 뜬 후 30여 년이 흐른 현재,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신항만 방파제,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권역별·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의 온갖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만이 군산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방조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헌신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2010년 4월 27일 부터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 33.9km 전체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방조제 주요시설물의 전기공급과 상수도 시설, 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행, 보건진료소 설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전라북도와 연합하여 새만금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신항만의 배후도시로 삼으며 신항만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8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전북도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해 지역갈등 분위기를 재촉발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김제시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에 김제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추후 행정구역에 대해 논의하자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30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매몰·퇴적으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의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해수부가 2019년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개발청이 2021년에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신항만 일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협의 등 공유수면의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당치도 않은 주장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1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규탄하고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 후 현장을 방문했다.

2023. 2. 14. 산단기업체 OCI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OCI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OCI는 1959년 동양화학으로 설립되어 2008년 폴리실리콘 상업생산을 성공했으며 2009년 OCI로 사명을 변경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1990년 설립된 군산공장은 현재 임직원 5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도 미래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김영일 의장은 “OCI 임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용과 투자 촉진에 대한 동반 협력을 하고자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초고속 미래산업인 반도체나 배터리가 중요한데다 군산이 RE100 산단으로 최초 지정되어 있어 이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OCI를 군산의 형제인 향토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강소기업·첨단기업·미래산업으로 가자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오늘 OCI에 와보니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볼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앞으로 기업들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기업투자를 이끌어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짐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곧 지주회사인 OCI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로 인적분할하는데 OCI 군산 공장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말레이시아 증설도 좋지만 군산 공장에서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려 중단되지 않고 가동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란 의원은 “새만금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에서 반대민원을 극복하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갑자기 중국진출을 해버려 OCI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 속에 오늘 공장을 견학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믿음이 간다”며 “앞으로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불안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종대 의원은 “불황으로 2020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같이 OCI에서 자꾸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군산 시민인 직원들이 편히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지역경제와 직원사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마인드로 지역활성화에 대해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미숙 의원은 “사업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누출사고 때 현장에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화학사고가 되 풀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하였고, 정 공장장은 “누출사고 등 화학물질을 접할 때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점검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자 의원은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환경문제도 잊지 말아달라” 강조하자 정 공장장은 “안전하고 환경에도 무해한 화학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건 전세계적인 화학회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2022. 8. 16. 말랭이마을, 군산선교역사관 건립사업 현장, 소룡동 야외수영장 방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대 개원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말랭이 마을과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 방안,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근대마을 조성사업은 근대문화도시와 연계된 시간여행체험공간으로 군산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 “지속적인 시설물 보강 및 레지던스 생활편익 지원은 물론 마을 장기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콘텐츠 개발로 우리 군산이 관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산 선교역사관은 군산 개항기를 비롯해 근대기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 역사를 기념하는 사업이며, 선교기념탑 또한 군산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선한 영향력을 기리고 기념하는 탑이다”며 “개항 초기 선교사 재조명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동감 있는 역사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룡동 야외수영장을 방문해 수영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안전사항을 꼼꼼히 체크 했을 뿐 아니라 안전요원과 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2. 8. 23. 장자도 스카이워크 현장, 새만금 어린이랜드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첫 번째로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자선 건설 현장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바다 조망권 확보 및 민원해소를 위해 불법 도로점용 및 시설물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서 해상인도교(장자교) 스카이워크 현장에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 쟁점이 되었던 이용객들의 편의성 확보와 시설 내구성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의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끝으로 오식도동에 있는 새만금 어린이랜드의 접근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2. 10. 20.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야노인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의 민간 위탁시설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현황 점검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야노인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 민간위탁관리시설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땀질식 기능 보강 대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경로식당 단가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성인지 프로그램 활성화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제공, 관리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부모 대상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사생대회 등 자체사업 운영 시 적합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센터가 제공하는 식단을 이용하는 시설과 비이용 시설 아이들의 발달사항을 비교 평가하여 균형 있는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대야 노인복지관에서는 농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수요 예측, 인근 지역에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등 어르신들의 실정에 맞춰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다.

푸드뱅크 사업, 재가 노인식사 배달사업(도시락배달) 등에 해당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자와 함께 토론하는 한편, 시설의 노후화와 석면 등 이용자의 안전과 관계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에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시설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 2. 15.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장자교 스카이워크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먼저 행복위는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에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행복위 위원들은 “단순히 인위적인 캠핑장이 아닌 훼손을 최소화하는 캠핑장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며 “펜스 등 인공물 설치를 자제하고 기존 시설물 및 지형을 최대한 살리면 자연과 어우러진 캠핑장 조성은 물론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른 선진지를 방문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추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방문한 행복위 위원들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주변 시설물 등 청결히 관리할 것”과 “향후 장자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완공되면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3. 3. 14.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청소년수련원의 기능보강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방문한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현장은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원(특교 50억, 도비34억, 시비196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부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25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관련 부서 및 공사 관계자의 사업 보고를 받은 후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현황을 확인했다.

방문한 현장에서 행복위 위원들은 “서군산복합체육센터는 서군산지역 시민 체육활동 증진에 큰 기여를 할 뿐아니라 부족한 시민의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시설 개관 후,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시설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주문했고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방문한 위원들은 기념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념관 주변의 조형물 및 충혼탑 등 시설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우리 군산은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발원지로 3.5만세 운동이라는 군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가 있음에도, 그동안 활용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군산만의 특색있는 3.5만세 운동 콘텐츠를 홍보하고 활용해 시민과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청소년수련관에 찾은 행정복지위원회는 집행부 및 시설 관계자와 함께 시설의 상태를 점검한 후, 누수와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방문한 현장에서 행정복지위원들은 그간 전반적인 시설관리의 부족함에 대해 지적하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계획 기능보강 사업계획의 추진 방향과 시설의 누수 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향후 기능 사업 추진 후 수련관의 많은 이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본래 시설 취지에 맞춘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2023. 6. 16. 가고 싶은 K-관광섬 조성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조성 현장(말도)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고군산군도의 ‘말도·명도·방축도’는 최근 문화관광부의 「가고싶은 K-관광 섬」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1,278M의 해상인도교와 연계한 캠핑장 및 해안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편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행정복지위원회는 관계자들과 함께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에 일부 부족한 부분과 함께 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고군산군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서 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매력적인 K-관광섬을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섬을 방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박시설 및 주차장 등 일부 부족한 인프라의 조성을 주문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현지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을 강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2023. 8. 16.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 홍보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했다.

군산시 홍보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기간인 8. 2.~8. 11.(9일간) 운영하며, 군산시간여행 마을 놀이터 라는 주제로 체험존, 놀이존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복지 위원들은 폭염속에서도 우리지역 관광지와 우수정책 홍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홍보관 운영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청취하며,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홍보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잼버리 기간 동안 시 홍보관 근무자와 읍면동 참여자들에 대한 폭염 안전대책을 촘촘하게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



■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2022. 8. 16. 피터팬승마캠프장,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249회 임시회에 앞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2곳의 현장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경건위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현장인 피터팬승마캠프장과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사업현황 청취와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시 유일의 유소년 등 학생승마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피터팬승마캠프장에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타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없이 관내에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체험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건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경건위원들은 “실외 마장 훼손정비 등 안전시설 보강 필요성 등을 공감한다”며 “군산교육지원청과의 협력 및 적극적인 학생승마체험사업의 홍보를 통해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참여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 소요, 시민 관심 증가에 따른 관련 민원 급증 등 민간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운영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경건위원들은 농촌지역 등의 미등록 중·대형 유기견들의 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기견 발생 및 센터운영의 실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2022. 8. 24. 뚝대산 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서군산 축구장, (사)전북산학융합원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뚝대산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와 서군산 축구장, (사)전북산학융합원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경건위는 뚝대산 절취 평지에 축구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입지할 계획인 뚝대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여 진출입로 동선, 부지 가용성 등 현장여건을 꼼꼼히 확인했다.

대상지는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 당북교차로 인근으로서 군장산단인입철도 공사 시 석산개발로 토사 및 암반이 절취되어 140,546㎡(약 42,500평)의 넓은 부지가 평지화된 공간이다.

경건위원들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대상지가 뚝대산 상부로서 일반 지대에 비하여 30m 이상 높아 통풍 및 조망이 양호하고 축구장 외 주차장, 화장실, 훈련센터 등 스포츠 지원설치의 집적화를 통해 향후 전지 훈련 전용시설로의 장기 확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장래 예정인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교차로와 기존 철도와의 간섭 우려를 지적하고 철도로 단절된 좌우측 부지간 연결 도로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구성을 주문했다.

이어 서군산 축구장 및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현재 공사 차량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사용 중지 중인 축구장에 대하여 시민 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와 함께 조속히 개방할 것과 향후





축구장, 수영장을 활용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시민 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경건위원들은 (사)전북산학융합원을 방문하여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산학연계사업의 특성상 전체 국·도비 보조금 지원 규모에 비해 매칭 시비는 적다고 하더라도 내실 있는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적자원들의 지역 내 취업이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요청하면서 시의회 차원의 사업 실효성 등에 철저한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2. 10. 7. 상권활성화재단 방문 (사진)



2022. 10. 27.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19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경건위는 외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특색있는 꽃 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만송이 국화 특별전시장을 중심으로 웰컴 포토존, 국화향기 정원, 친환경테마존, 먹거리 등 축제장 곳곳을 동선별로 둘러보고 운영사항을 면밀히 벤치마킹했다.

경건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군산시도 소규모 공원 내 국화꽃과 지역 예술가 작품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연경관 활용 사계절 힐링 정원 고도화 사업 발굴, 경관 조성용 화단 국화 품종 다양화 및 국화재배 시민 대상 교육, 경관 조성용 식재지 현장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 1. 16.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산시 특별교통수단(과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수탁기관을 방문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관련한 발전방향 모색에 나섰다.

경건위는 수탁기관인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현안과 운전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건 위원들은 수탁기관 및 운전원들은 보통 3년마다 수탁기관 변경 선정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매물비용 방지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의 행정재산으로서 고정적인 사무실과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운전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이 아닌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과 장기근속자 대우와 위험수당 및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덧붙였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반 노약자 등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승합차 대비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는 임차 택시제의 병행 시행을 제안했다.



2023. 2. 15.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253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현대건축의 거장인 故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평가되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레스토랑 등 수익 공간과 전시·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공 공간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침체된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도비 보조금 등 총 90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연계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노후된 건물이므로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면서, 특히 대학로 인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하통로 공사 시 본 건물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지붕방수공사 등 각 공정별 철저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로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하여 경계를 표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기존 주차장 이용면적이 줄어드는 데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부족했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공간에 공사안내표지를 확충하고, 본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의 주변 상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축적 자산가치를 고려한 원형보전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신·구 재료의 대비 등 전체적인 건축물 입면 디자인의 불균형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고려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은 경암동 화력발전소 인근에 국·도비 보조금 등 총 2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층 연면적 633㎡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카페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5월 개장을 목표로 진출입로 등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경건위 위원들은 애초에 부지 선정단계에서의 철저한 입지검토가 부족했다며 기존 장미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구암동 동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는 불과 1.9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이마트가 있고 인근에 대규모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이 건축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해당 시설의 활성화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격상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이지만 현장 내 부설주차장은 14면 뿐이어서 주변 부지를 임시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용객 불편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 3. 1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제254회 임시회 회기 중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현황 청취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경암동 504-2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1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구매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소상공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3~4월 중에 건축공사 준공 및 기자재 확보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개장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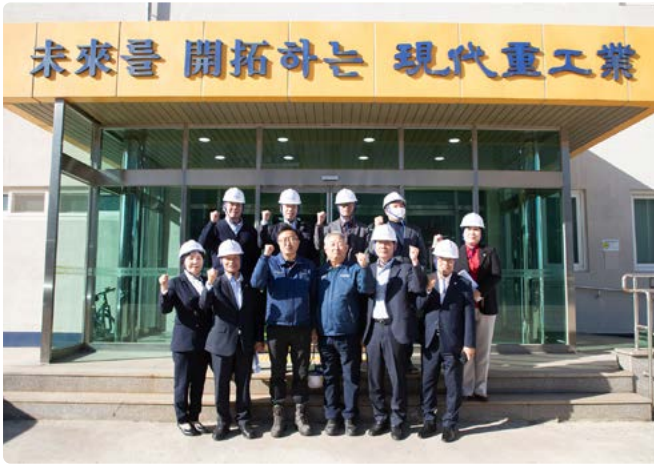
경건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대리점들과 최근 외부 자본에 기반한 대형 식자재마트들의 개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수퍼마켓, 마트 등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아진 구매가격에 연동하여 적정 유통마진을 반영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 또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매

가격 상한제 미이행 등에 대한 패널티 등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당 센터 조합원인 소매점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소매점들의 매출 증대가 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활성화와 센터 자체의 영업실적 호조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야 센터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센터 개장에 대비하여 군산시와 참여단체 간 상생협력 등에 더욱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다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방문하여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소 관계자들에게 재가동이 힘겹게 성사된 만큼 군산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지역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군산조선소 인력 채용 시 군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강조했고 지역인재 양성 및 숙련 인력이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관내 대학 및 교육 훈련기관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군산에서 물류비 등을 지원해주는 만큼 운송이나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도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되도록 선정하고 기준에 미달되어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업체에 안내하는 등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3. 6. 20. 화훼실증연구단지 방문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제256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새만금 농업용지에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 원예작물 시범재배사업 발굴’을 위해 화훼실증연구단지를 방문하여 시설 및 현장을 확인하고 주요사업 현안을 청취하였다.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내에 위치한 화훼실증연구단지는 시설면적 약 1.5ha로 새만금 간척지 내 나리 재배를 위한 적정 유기물, 토양 피복자재 선정 등 친환경 안정생산 기술을 연구하며, 새만금은 나리 구근 최대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토질환경이 유사하여 나리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들과 함께 나리꽃류 중심의 현장을 둘러보고 주요사업 현안을 청취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원예작물 시범재배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나리꽃 등 초화류에 대한 화훼 및 경관 작물 단지화를 통해 농업 생산 및 관광자원화 시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기타 의정활동

(1) 의회 외교

① 군산시의회 의장단,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 접견

- 몽골에 군산 쌀 수출 및 농특산물 교류활성화 방안 논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이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을 접견하고 군산 쌀 등 농특산물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9월 22일 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김우민 부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툽가 부야 서기관 등 몽골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쌀 수출방안 및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를 모색했다.

의장단은 환담 자리에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매 등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몽골에 군산 쌀 수출 가능성 타진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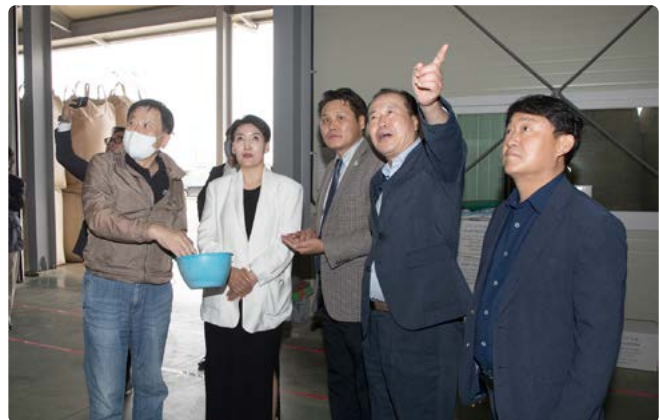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군산의 특산품을 더 많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군산 쌀의 우수성과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군산시와 몽골 간의 협력 도모로 앞으로 더 많은 농특산물 교류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다른 나라의 쌀보다도 우리나라 쌀이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며 특히 군산에서 생산되는 쌀은 칼슘 및 마그네슘 등 무기물 함량이 풍부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이 월등하다”며 “몽골 이마트 등에 군산 쌀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상생발전하는 군산시와 몽골 간 국제교류를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툽가 부야 몽골 인민당 서기관은 “국가 간 경제, 무역, 문화, 예술 등 활발한 교류를 해오면서 투자와 기업진출에 따라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무역협력 강화로 친밀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은 환담 후 대야면에 소재한 상리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군산 쌀의 도정, 가공, 포장 과정 등을 시찰하고 유통 과정 등을 논의했다.



② 군산시의회, 미국 풀러턴시와의 우호 지원사격!

- 미국 풀러턴 시장, 군산시와 간담회에 앞서 군산시의회와 오찬 및 기업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은 2023년 4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 시장과의 간담 및 풍림파마텍 기업 시찰을 통해 시와의 우호관계 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풀러턴 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위치한 곳으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풀러턴 시는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공립 학교들이 다수 위치해 있고 최고의 학군과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프레드 정 시장은 풀러턴 시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2021년 12월 풀러턴 첫 한인시장이 되었으며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며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K-방역 선도 기업인 풍림파마텍 조희민 대표와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새만금 산단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하게 하였으며, 풀러턴 시장 일행은 연구소, 금형개발실, 포장실 등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와 함께 FDA승인 및 미국시장 진출 여부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는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외교에 중점을 두어 지역 우수기업과 생산품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풀러턴 시는 지난 2022년에 아시아 계열 기업사 미주

물류 최대 규모의 미주 삼성로지스틱스 단지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미국 풀러턴 시장의 방문을 통해 군산시의 지역 특산물 및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레드 정 시장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소 주사 잔량 기술이 적용된 특수 주사기(LDV)를 개발한 풍림 파마텍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풀러턴 시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육성하려는 포부로 한국의 의료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풍림파마텍 방문과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은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프레드 정 일행은 풍림파마텍 시찰 이외에도 관내 RPC,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등을 둘러보았고, 1일 군산시청을 방문하였다.



③ 중국 연태 국제과채식품박람회 등 참석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 외 10명의 의원은 중국 위해시와 연태시를 방문하여 위해시 시민예술관, 세고광전자 견학과 연태에서 열린 국제과채식품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군산시 우호도시인 중국 위해시는 웨이하이는 산둥반도 가장 끝에 있는 인구 300만의 도시이며, 중국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중자유무역구’가 조성되어 있다. 항만이 발달하여 중국 내에서도 물류의 거점지로 손꼽히며 자연경관이 뛰어나 ‘국가 산림 도시’로 지정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로도 선정된 레저·휴양도시이다.

군산시와 20여 년 동안 국제자매도시로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온 중국 연태시는 산둥성 동부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도로, 철로, 항로 등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한 산둥성 GDP 2위의 경제 도시다. 또한 농수산업과 경공업이 발달하였으며 16개 종합 및 전문 대학을 갖춘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태에서 개최된 국제과채식품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과일, 채소 식품 등을 전시하고, 심포지엄 및 콘테스트, 시식회 등 여러 부대행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진행되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국제과채식품박람회 참석을 통해 군산 농수산업의 특산품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2) 폭우피해 기자회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23년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우피해에 따른 군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이후 엿새 동안 이어진 호우경보 기간동안의 기록적인 호우로 유례없는 폭우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군산은 60년 만에 강우량으로 역대급 물폭탄이 쏟아져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연이어 계속되는 비로 피해가 불어나고 있으며, 산사태 및 옹벽 붕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군산시 공직자들이 대규모 하수정비 및 빗물받이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급경사지 및 하천, 유지지 등 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수백mm의 폭우에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스러웠지만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여 수백 명의 군부대 장병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진척이 미비한 상황으로 수재민들과 재난 위험지구 거주민들은 생계 걱정과 하루하루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3개 시군 중에 군산이 없다는 사실에 군산시민들은 또다시 실의에 빠졌고 더군다나 충남과 경북은 각각 4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전국에서 침수 농경지가 가장 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 2곳만 지정되어 시·군 단위로 볼 때 익산 단 1곳만 지정된 결과로 전라북도의 무능함과 방관적 행정이 역력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권 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군산·익산·김제 등 3개 시군 중 유독 군산만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방관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에 있어서도 군산을 소외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집중 호우 동안 전북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군산시민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실사조사하고, 성토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산시의회는 우리는 시급한 정부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 전라북도의 성의없는 대처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피끓는 울분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직접 호소에 나섰다며 ▲정부는 군산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선포해 줄 것 ▲정부는 신속한 예산 지원은 물론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전라북도와 정부는 수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전라북도는 군산을 포함한 타 시군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와 전라북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인사청문회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는 2023년 8월 8일 채행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군산시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2월 전 대표이사가 사퇴로 군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여 군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적극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난 7월 군산시의회와 군산시 간 인사청문 협약을 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채행석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총 행정복지위원회 3명, 경제건설위원회 4명 등 총 7명이며 위원장으로 김경구 의원, 부위원장으로 서동완 의원이 선임되었고, 서동수·설경민·윤신애·최창호·한경봉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작년 12월 말에 퇴직한 후보자는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을 지내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당연직 이사로 역임한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후보자가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해온 것에 행정능력은 우수할 수 있으나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이끌어 갈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특히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고 등 채용절차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직을 마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직무 연관성이 짙은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윤리법」 위배 여부에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제강슬러그문제 등 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과 과거 정부와는 다른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비한 이익창출 방안이 있는지 등 경영 대비방안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이익극대화 방안과 패널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새만금특집

1. 새만금관할권 대응 (2022년 7월 ~ 2023년 12월)

- 1) 총괄대응일지
- 2) 주요활동
 - (1) 새만금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문
 - (2) 새만금 관할권 관련 칼럼
 - (3)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대응 보도자료(2023년)
 - (4) 새만금 대응 사진첩

2. (시민특집)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

- 1) [홍보기자단] 군산시의회에 보내는 응원메시지
- 2) [홍보기자단]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ㅋ 뉴스
- 3) [홍보기자단]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에서 군산시의회의 범시민서명운동
- 4) [홍보기자단] 워크숍 참석 후기
- 5)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새만금 대응 시민 논평



군산과 전북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대응

1) 총괄대응일지

일 자	대 응 사 항
2022.10.13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새만금 신항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 주문
2023.01.02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신항, 자명한 군산 새만금 신항이다’
2023.01.11	군산시의회 긴급 의원총회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대응 방안 논의]
2023.01.11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브리핑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2023.01.11	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 현장방문
2023.01.12	최창호 의원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3.01.12	전라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설명회 보이콧(관할권에 대한 道방관 비난) ‘신항만의 군산 관할권을 명백히 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라’
2023.01.17	김우민 의원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023.01.30	군산시의회의원 및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언론 브리핑 [군산새만금신항·동서도로의 관할권은 ‘군산시’임을 천명한다]
2023.01.30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을 위한 도지사 면담 요청[1차 시도] (⇒ 성의없는 전라북도 대응으로 무산)
2023.02.09	새만금신항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도지사 면담요청 공문발송[2차 시도]
2023.02.09	윤신애 의원,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2023.02.20	새만금신항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도지사 면담요청 공문발송[3차 시도]

일 자	대 응 사 항
2023.02.24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과 면담 및 건의문 전달
2023.03.06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언론 기고 [군산새만금신항의 성장동력과 정체성에 초점을]
2023.03.09	군산시의회 의원총회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방안 논의]
2023.03.21	군산시의회 집행부와 간담회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 대응]
2023.03.22	군산시의회 의장단 회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논리 개발 외]
2023.03.15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윤신애 의원)
2023.03.27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서동수, 서동완, 윤신애 의원)
2023.04.10	군산시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과의 간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방안 제시 촉구]
2023.04.11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주장과 제로섬 게임을 즉시 중단하라](전북도민일보)
2023.04.18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관련 집행부와의 간담회
2023.04.25	군산시의회 의원총회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논의]
2023.04.25	서은식 의원, ‘전라북도의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의 확실한 통합 방안 제시 촉구’ 성명서 채택
2023. 4월중	군산시의회 의장, 민방위교육 등 새만금관할권 시민 홍보
2023.05.13	군산시의회,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참여
2023.05.31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군산과 김제 간 분쟁과 분열의 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2023.06.14	우종삼 의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2023.06.14	윤신애 의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3.06.14	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의원 간담회

일 자	대 응 사 항
2023.06.27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브리핑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 규탄 기자회견
2023.07.23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김제시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상생협치의 자세를 가져라!]
2023.07.27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전북도의회 브리핑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규탄 성명] 기자회견
2023.07.31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전북도청 정문, 400여 명 참석)
2023.08.01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언론 기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을 관할권 분쟁 허브로 만들지 않으려면]
2023.08.02	김영란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김제시의 흑색선전과 무모한 역사왜곡은 사실일까?]
2023.08.04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간담회 참석
2023.08.08	군산시의회,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 행위 규탄 건의문 전북도청 전달 -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2023.08.10	김우민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왜 ‘군산’새만금신항인가]
2023.08.14	지해춘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새만금 관할권,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다]
2023.08.17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군산새만금신항 인근, 700여 명)
2023.08.18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세종정부청사 앞, 1,100여 명)
2023.08.29	윤신애 의원,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2023.08.31	최창호 군산시의원 언론 기고 [전라북도, 이제부터라도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2023.09.04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 브리핑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9.05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분쟁 및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대응방향 제시 - 집행부와 간담
2023.09.06	새만금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전라북도지사 면담 요청
2023.09.07	윤신애 의원,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일 자	대 응 사 항
2023.09.07	양세용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
2023.09.08	김영일 군산시의장, 강의 [새만금의 미래와 우리의 준비] (전북인력개발원, 50여 명의 청소년 대상)
2023.09.15	김영일 군산시의장 언론 기고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2023.09.18	새만금 관할권 해결 촉구 관련 전라북도지사 면담 재요청
2023.09.19	군산시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삭발투쟁
2023.09.20	군산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회복과 새만금 관할권 방안 논의
2023.09.22	군산시의회,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 참석
2023.09.26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중재 전라북도지사 결단 촉구 기자회견
2023.10.05	군산시의회, 새만금 긴급 의원간담회
2023.10.06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간담회
2023.10.12.~13	군산시의회, 범시민가두 서명운동 전개(전라북도 중재 촉구)
2023.10.16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 결단 촉구 집회
2023.10.24	윤신애 의원,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 성명서 채택
2023.10.26	김영일 군산시의장, KCN 이슈와 화제 출연 - 새만금 관할권 전라북도지사 중재 촉구
2023.10.31	이래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장 언론기고 [새만금관할권 분쟁, '역전의 명수'저력을 보여줍시다!]
2023.11.02	군산시의회 언론브리핑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관할권 주장을 중단 촉구]
2023.11.03	황대욱 한국예총 군산지회장 언론기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한다]



일 자	대 응 사 항
2023.11.07	군산시의회,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 참석 (국회의사당)
2023.11.09	김성희 군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언론기고 [전라북도지사, 지역소멸 위기에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라]
2023.11.10	심명수 군산시수협어촌계협의회회장 언론기고 [떨레야 떨 수 없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2023.11.13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간담
2023.11.16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언론브리핑 및 전북도청 서명부 전달 [정부와 전라북도는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3개 시군 상생방안 제시 촉구하라]
2023.11.17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 (세종정부청사 앞, 600여 명)
2023.12.05	서은식 의원,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 채택
2023.12.05	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담회 실시



2) 주요활동

(1) 새만금 관할권 관련 기자회견문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새만금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군산시 앞 해상을 매립하여 전라북도의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1991년 새만금방조제 사업이 첫 삽을 뜬 후로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의 온갖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만이 군산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방조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헌신적으로 협력해 왔다.

또한, 새만금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2010년 4월 27일부터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교통을 위해 33.9km 전체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방조제 주요시설물의 전기공급과 상수도 시설, 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행, 보건진료소 설치 등 이루어야 할 수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또다시 작년 8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전북도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해 지역 갈등 분위기를 재촉발시켰다.

최근에는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 및 지역 주도의 원활한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과 함께 새만금 신항만에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과 연계한 식품특화부두, 곡물 터미널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위를 선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관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30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매몰·퇴적으로 인한 수심 부족에 따른 항만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항만으로 해수부가 2019년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개발청이 2021년에 변경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점·사용 허가, 어업면허, 불법어업 단속, 어족자원 관리 등 공유수면 관할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왔다.

군산시가 과거부터 관리해 온 공유수면에 들어서는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개별구역이



아닌 그 외측의 군산시 자치권한이 존재하는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위치하며 두리도에 접하여 조성되고 있음에도 김제시가 이같이 독단적이고 이기적으로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견강부회(牽強附會)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김관영 도지사와 김제시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강력하게 해결하라.

하나. 군산시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하여 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전라북도는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조속히 해결하라!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아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1991년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계속해서 내부개발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이 안타깝게도 지역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제시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스마트수변도시, 새만금글로벌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군산새만금신항의 배후 도시로 삼아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최근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



‘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김제시가 내세웠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해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 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 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다.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어업면허 및 허가, 보전 및 관리 등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동서도로는 120여년간 관리하며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동서도로 건설공사 관련 신고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러한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를 김제시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28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침략 행위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2023년 1월 3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김제시의회 결의안」 규탄 기자회견문

“군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2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야한다고 소유권을 강조하며 전라북도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해 규탄·결의했다.

이는 김제시의회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며, 도발행위(소유권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오늘부로 군산 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 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하여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자는 전라북도의 권유와 협약서 강요는 ‘을사늑약’과 진배없다며 이를 밀실행정과 자치권 농단행위로 규탄하는 한편, 김제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용인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제시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역 상생을 위한 추진절차를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비난하는 것은 후안무치적 태세이며 갈등 극복과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비하하는 행동이다.

김제는 지속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27만 군산시민, 18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새만금 전체가 김제 관할이고, 개발이 김제만을 위한 사업이며, 대법원

판례가 새만금을 김제시만의 전유물로 결정한 것처럼 허무맹랑한 소리를 유포하고 있다.

대체 김제가 오늘날의 새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던 말인가? 김제가 희생하고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은 전북도민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군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건, 바로 군산시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도 아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 신항이 접해있는 두리도, 비안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군산이므로 당연히 군산새만금 신항 역시 군산 관할일 수밖에 없다. 김제의 터무니 없는 주장은 명분없는 도발행위(소유권 주장)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김제시의 도 넘는 획책을 성토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이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대상도 아니며,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은 군산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이다. 김제시는 무모한 소유권 도발행위를 당장 멈춰라.

하나. 김제시는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적 태도와 전라북도 분열을 조장하는 ‘先 관할권 인정 (김제로 소유권 인정)’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하나. 김제시는 지역이기주의로 전북발전에 역행하지 말고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창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는데 동참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선 소유권) 주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명확하게 중재하라.

하나. 새만금통합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2023년 6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규탄 성명서

“일제강점기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일본 극우파들의 발언이다. 이는 일제가 갖은 착취를 가한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헛소리다.

이러한 망발은 전라북도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최근 이견식 전 김제시장이 새만금에 이어 현재 군산 관할인 고군산군도까지 김제의 소유권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면서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는 몰상식한 역사 폄해를 자행한 것이다.

전 김제시장의 망발에 연이어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도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판결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당시의 판례를 왜곡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의 김제 귀속을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의회도 이에 합세하여 지난 21일 만경 7공구,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을 8월에 반드시 결정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중앙분쟁위원회 새만금 관할권 8월 결정 촉구」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여 인근 시군을 자극하는 등 막가파식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북 1호 대통령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가 내걸리고 이를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중차대한 상황이다. 김제의 시대착오적 영토 분쟁은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도민과 3개 시군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뒤로하더라도 나라의 아픈 역사를 이용하여 김제에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한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수탈의 수단으로 군산과 김제에 철도와 도로가 놓여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취의 흔적이 두 도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자가당착적 역사 폄하가 진정 전북 발전을 논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인지 한심스럽다.

김제의 이러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혁파되어야 할 ‘킬러규제’로 새만금 개발과 민간투자,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명백한 킬러규제다.



만약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엽적인 개발에 그친다면 전라북도는 김제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과 뚝뚝 뭉쳐 군산새만금땅을 지키고 지역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 김제시의 도 넘는 만행을 강력히 성토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김제시는 군산 소유의 군산 동서2축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을 빼앗아 가려는 파렴치한 ‘선 관할권’(김제로 소유권 인정)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새만금을 정치적 불모로 삼아 역사왜곡까지하며 전북의 발전과 3개 시군 갈등을 조장하는 등 갈라치기하고 있다. 김제시는 당장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도발행위를 즉각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말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의 대안을 제시하라!

2023년 7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북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노골적인 전북 죽이기에 따른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대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떠넘기고 있으며, 여론몰이로 전라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조장하고 있다.

잼버리 이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무려 78%인 5,147억원이나 삭감하였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62억)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새만금 국제공항(580억⇒66억원), ▲새만금신항만(1677억원⇒438억원) 등 반영률이 30%를 넘기지 못했다. 단지 동서도로 자전거도로 사업만(16억4천만원) 그대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며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여 새만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이후 4번째이다. 1991년 착공 이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공항·철도·항만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시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 정부는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분풀이를 대놓고 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새만금 신공항은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반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며 무려 올해 예산의 41.3배나 증액시켰다. 정부는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는 명백한 전북 죽이기요,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이지 이번에 치러진 잼버리 대회와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씌우는 의도는 무엇인가. 대회를 개최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한낱 전라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며 새만금 사업까지 폄훼하고 내년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까지 들먹이고 있어



전북도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단지 잼버리 대회 개최지란 이유로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파상공세를 멈춰라. 계속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을 죽이기에만 급급한다면 군산시민을 포함 180만 우리 전북도민은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도민의 생존권과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축소를 성토했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분별한 전북과 새만금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꿈을 가꾸는 땅인 새만금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살려내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을 위한 상생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and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대통령의 전북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023년 9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새만금 관할권 중재 전라북도지사 결단 촉구 기자회견문

“근래 전라북도는 뭐 하나 제대로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 별로 없다. 전북의 정치권은 위기대응 능력이나 전북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십의 부재와 무능한 정치의 단면만 보여주고 있다는 도민들의 원성이 높아져만 간다. 이제는 전라북도 지사와 정치권이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난 8월 새만금 SOC예산이 78% 삭감하면서 “잼버리대회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신항만 건설의 경우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는 등 사업진행이 부진했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이다.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이다.

새만금 관련 관할권 분쟁은 각 사업마다 쟁송이 제기되어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 7공구 방수제 등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중으로 지난달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 달 5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새만금 1·2호 방조 제도 헌법소원 중에 있다.

SOC 예산을 깎고 기본계획까지 다시 짜는 등 불투명해진 새만금 사업은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새만금에 최근 1년여 동안 30여 개의 기업이 6조원 대 투자를 약속했고,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 금융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산업은행이 손을 잡았으나 잼버리 파행 이후 투자가 지속될지 불안한 기류도 흐르고 있는 가운데 관할권 분쟁에 대한 부각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전라북도의 침묵 속에 관련 시군의 관할권 갈등은 거세지고 있다.

78%에 달하는 정부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 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총리가 입장 발표까지 한 관할권 다툼은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관련 예산과 기본계획 변경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씌우기도 있지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3건, 헌법소원 1건 등 각 사업마다 소송이 제기된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간 갈등과 반목이 부각된 탓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군산·김제·부안의 대립과 갈등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잼버리 파행에 이어 3개 시군의 관할권 갈등으로 인하여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데, 시군 간의 갈등 중재는커녕 전라북도가 당면한 고비에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위기 돌파 능력이나 어떠한 비전과 지도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방관으로 자초한 파국의 불씨를 끄려면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미래를 위하여 전라북도 정치권과 전라북도지사의 무능함을 성토했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지역최대 위기극복을 위해 비전과 지도력을 보여줘라!

하나. 전북 정치권은 무능한 정치로 전북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을 짓밟지 마라!

하나.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 상생안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라!

하나. 전라북도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상생협치 및 통합방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명하고 신속하게 제시하라!

2023년 9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

“전라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정치권과 수도권은 통합 열풍이다. 그런데 전라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은 없이, 군산·김제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

이렇게도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시민들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정치적 이유 및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78%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으로 지방 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더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섞인 원성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전라북도 지사의 위기관리와 조정능력에 대한 지도력의 부재를 한탄하고 있다.

17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만금 예산삭감에 대응하기도 모자란 시기에 이렇게 불신에 불신이 이어지면 결국은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야 할 때다. 백척간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없던 힘도 끌어모아야 한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군산과 김제가 상호 간 관할권 주장을 멈추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현재의 실상은 김제의 관할권 주장으로 새만금 사업은 물론이고 도지사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에도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와 우리 군산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김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군산시의회와 26만 군산시민들은 오직 새만금의 성공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의 잠정적 중단과 김관영 지사가 제시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설립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제는 군산과의 관할권 다툼을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새만금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관할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재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새만금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고 상생협치 방안을 앞장 서 제시하라!

2023년 11월 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정부와 전라북도는 중분위의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3개 시군 상생방안을 제시하라!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새만금 SOC예산 대폭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와 무관하며 인근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임을 대정부질의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배경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며 새만금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관할권 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군산과 김제가 법대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어떻게 전라북도의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를 이렇게 방관조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중단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김제시의회는 소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며 관할권 주장만 하고 있다. 급기야 11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중분위 회의를 겨냥하여 김제가 먼저 세종시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관할권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관할권 주장에 군산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중재없이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끝없는 정쟁이 될 것이다.

이틀 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KBS 심층토론에서도 토론자 대부분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서 중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중심도시로 나아갈 교두보다. 이제는 무능력한 전라북도에 앞서 국가대업인 새만금의 관할권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한다.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마저 이를 도외시한다면 향후 관할권 갈등으로 빚어지는 새만금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새만금 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상정되어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여타의 사례만 봐도 중분위의 결정은 또 다른 쟁송만 낳을 뿐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중분위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서 이 끊임없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새만금 3개 시군이 화합하고 새만금의 발전, 나아가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메가시티’를 반영하고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당면한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무책임한 방관과 분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6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2) 새만금 관할권 관련 칼럼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신항, 자명한 군산 새만금신항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규모의 국가적 정책사업이자 전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新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세계 최장의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개발사업의 첫 삽을 뜨지 어언 30여 년.

애초 기대와 계획과는 달리 여러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던 새만금 개발사업은 최근 공공주도의 매립공사와 신항만을 비롯한 광역 기반시설 건설,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모처럼 만에 개발에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산의 오랜 이웃사촌인 김제시는 오랜만에 맞이한 순풍에 돛 단 듯한 새만금 개발의 긍정적 분위기에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는 작태만을 보이는 실정이다.

김제시는 작년 8월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각종 편법을 동원 전북도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갈등 분위기를 재촉발시키더니 최근에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내측의 새만금 동서도로와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의 관할권을 우선 김제시로 인정 한 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이른바 ‘선(先) 관할권 인정 후(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매우 희귀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무엇보다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항만이다.



이는 다름 아닌 해양수산부가 2019년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군산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 공유수면 관리권자로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공유수면을 120여 년 동안 군산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 왔고 여의도 20배에 이르는 5천700만㎡의 공유수면과 그에 따른 어업권 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항만의 방파제는 군산시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의 군산시 공유수면 내의 시설이며 신항만의 어선보호 시설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9번지와 연결된 매립지로서 군산시민 360여 명이 이곳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항만은 새만금 방조제와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방조제에서 700m가량 떨어진 해상에 별도의 인공섬에 부두시설, 접안시설, 항만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신항만은 김제시가 관할하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앞쪽 해상의 인공섬뿐만 아니라 무녀도, 비안도, 두리도 등 사실상 군산시 관할의 고군산군도의 지리적·자연적 입지를 전체 항만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새만금 제2권역에는 김제시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등 군산시 행정구역과 군산시 관할의 제3호 방조제가 포함되므로 신항만은 제2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김제시가 관할해야 한다는 김제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신항만 주변의 무녀도, 비안도, 두리도 등은 이미 군산시 관할이므로 신항만 운영의 전체적인 편의와 효율성 관점에서도 신항만의 관할은 우리 군산이 적합한 것이다.

새만금을 마치 김제의, 김제에 의한, 김제만을 위한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작금의 김제시의 황당무개한 주장과 이기적인 행동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역사적 패륜행위이며 새만금 인근 지자체 모두를 공멸(共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얼토당토않고 후안무치한 주장과 무모한 논쟁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제발 자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과 시민을 볼모로 한 여론전에 좌고우면(左顧右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자체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새만금 신항의 분쟁에 대해 군산시 관할권이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산시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기고일 : 2023. 01. 02.)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언론 기고

군산새만금신항의 성장동력과 정체성에 초점을

21세기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물류 활동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 등을 통해 배후 항만도시의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개항 124년 역사를 간직한 군산항은 전북 유일의 무역항으로서 전북 경제의 산실이며 원동력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군산항의 토사매몰 퇴적으로 인한 항만기능 상실을 보완하고 새만금산업단지 등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군산시에 군산새만금신항을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산새만금신항은 조성 배경부터 군산항과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군산시 어민들과 시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1,750만 평의 공유수면을 국가에 양보하고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사회기초시설의 공급, 신항 건설 등 아낌없는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해왔다.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산시에서는 신항 건설 예정지역의 공유수면이라는 공공재를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관리했는데, 김제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공공재 관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립 후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편익만 누리하고자 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시는 현재의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을 경계 짓는 해상경계선을 일제강점기 잔재로 깎아내리고 역사서까지 동원하며 신항이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건설되는 해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관할구역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항만은 부두시설만 갖추고 선박이 입출항하는 단순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항만은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접속 지로서 자연적·지리적 요건 이외에도 교통·물류·유통·보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며 항만



**군산새만금신항이 건설되는 해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관할구역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동량의 공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정책, 항만 이용자와 운영자 간 합의 용이성, 숙련된 항만 인력의 공급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항만과 도시는 일방적이거나 단순히 지역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배후 산업단지 등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군산시는 일반산단, 국가산단, 국가2산단,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산단 등 국내 최대인 1,450만 평을 보유하고 있으나 김제시는 90만 평의 지평선 산단뿐이다.

국내 무역항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울산항 등은 지역 산업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성장했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내 10대 도시 중 4개 도시가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수 8만이 조금 넘고 산업단지가 100만 평도 채 안 되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과연 군산새만금신항을 환서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시킬 수 있을지는 정부와 전북도가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특히나 도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고 이웃의 지자체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고민하여야 하며, 군산시에서도 새만금사업과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은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임을 간과하지 말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고일 : 2023. 03. 06.)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억지주장과 제로섬 게임을 즉시 중단하라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먼 우리의 이웃 하나의 행태를 보면 불현듯 그러한 속담이 생각난다. 본래 응당히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야단법석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탐욕이 생겨 그것을 뺏으려는 마음을 갖는 도둑은 제발 저리게 돼 주위의 본질을 흐리고 야단법석하여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인지상정인 법이다.

최근 새만금 지역은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이후로 동서도로 개통과 수변도시 착공 등으로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개최가 예정된 새만금 잼버리 사업을 위해 군산시에서 시작되어 김제시를 거쳐 부안으로 이어지는 남북도로 또한 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새만금 잼버리 같은 전 세계인들이 모인 대화합의 큰 잔치를 앞두고 계속 언론에서 분쟁을 유발하고 야단법석 떠드는 김제시의 행태는 도둑이 제발 저리는 행태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현재 새만금지역은 수변도시,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굵직한 사업들이 향후 수개월 및 수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업지역에서 지금과 같이 인근 지자체들간의 관할구역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새만금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뿐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여론마저 악화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인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에 대한 분쟁은 김제시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 촉발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하고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군산시에서는 ‘선 개발, 후 관할권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제시는 편협한 시각으로 새만금 지역 관할에 대해 소유권을 먼저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의 분쟁을 야기하여 물 흐르듯 추진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이 진척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균형발전이란 새롭고 획기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지, 김제시 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려는 행위를 통해 몸집만 불리는 일차원적인 발전행위가 아니다. 또한 군산시는 기존



**김제시는 농업도시로서 주력해왔기 때문에
새만금신항과 같은 대규모 항만을 운영할만한
경험과 노하우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군산항 운영을 통해 항만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수행해 온 반면, 김제시는 농업도시로서 주력해왔기 때문에 새만금신항과 같은 대규모 항만을 운영할만한 경험과 노하우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급감하는 인구문제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전국에서는 메가시티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및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완주 등 대도시에서조차 지역소멸을 대비하여 지자체 통합의 방향인 메가시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통합으로 가도 모자랄 이 시점에서 유독 우리의 이웃인 김제시만이 ‘선 관할구역 지정, 후 개발’의 각자도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을 곳곳하게 펼치고 있으며 지역 간 상생의 대안 중 하나인 통합새만금시 출범 등에 반대하고 있는 엇박자 행보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김제시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군산시 새만금에 있는 넓은 바다와 같이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새만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새만금의 발전이 곧 전라북도의 발전과 직결되며 이것이 군산시와 김제시가 모두 상생하는 길임은 명백하며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들도 통합과 상생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줌도둑과 같이 웅졸한 지역이기주의로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고 상처만 입게 되는 제로섬게임을 우리의 이웃이 더 이상 멈춰주길 바라는 바이다.

(기고일 : 2023. 04. 11.)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군산과 김제 간 분쟁과 분열의 벽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흔히들 하는 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다. 물건을 훔치려 남의 집에 들어간 도둑이 주인에게 들켜 이웃 사람들이 몰려드니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도둑을 잡아라”하며 피해자인 척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마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이 모든 분란이 군산에서 비롯된 것처럼 적반하장을 부리고 있는 김제의 모양새다. 최근 김제는 시민을 모욕했다, 원색적인 언론보도를 일삼는다, 군산이 새만금을 독차지하겠다는 야욕의 이빨을 드러낸다는 등 연일 군산시의회 의장인 본 필자와 함께 군산을 맹비난하고 있다.

김제는 더 이상 군산 뒤에 숨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종이 지자체라는 등, 새만금 공동발전 절대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지 말고, 군산 때문에 못 한다는 새만금과 전북도의 공동발전, 상생대로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길 바란다. 군산은 김제가 관할권에 대해 건건이 쟁송을 하는 행태를 멈추고 올바른 대안과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던 군산이 왜 갑자기 올해 초부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사색을 걸었을까?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 발단이다. 뜬금없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주장이 새만금을 공동과제로 한 3개 시·군 상생 방안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이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첫 단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기대를 해왔던 군산은, 전라북도 내 다른 시군이 어떻게 되던 말던 내 땅이나 찾고 보자는 김제의 주도면밀한 계략에 무척이나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뿐인가? 김제는 그동안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르자는 양머리를 내어놓고 뒤에서는 온갖 정치적 쟁점과 법적 분쟁으로 내세우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여왔다. 작년 지방선거 때도 김제는 모 시장 후보자 출마선언 과정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김제로 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올해 2월에는 새만금 신항의 정식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으며, 동서도로·만경7공구 등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야금야금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 또한 당연히 군산시 관할인 것을, 김제의 어깃장에 해양수산부에서 관할권 결정을 신청 중이다.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쟁송을 제기하는 게 김제에서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라는 말인가? 당장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고 현재 군산시 행정구역인 군산새만금신항만은 물론 두리도, 비안도마저도 빼앗기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다. 과거 1·2호 방조제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시민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함께 울분을 토로하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몸부림이 제정신이 아닌 행위이고 야망과 야욕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말인가?

더군다나 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때마다 김제 서부지역과 현재의 군산지역이 고려시대 임피현에 포함된다며 김제와 군산은 역사적 뿌리가 같으며 동질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김제는 고군산군도가 만경현이었다며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하는, 이 아전인수격인 역사의 해석을 어떻게 가만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새만금 역사의 한 자락에 서 있는 군산시의회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3·1만세 운동 때 항거한 것처럼, 우리 군산시민들은 새만금 관할권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전라북도에 외쳐대는 것이다. 이것이 군산시민으로서, 전라북도민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지수 분석 결과 전라북도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 이 중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라북도가 언제 소멸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군산항은 사라지고, 전라북도 유일의 항구도시인 군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 중추도시 중 하나인 군산이 소멸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도에서도 나서야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함에 앞서 각자도생적인 새만금 관할권 주장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공존공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개 시군 간 상생, 나아가 전북의 생존을 위해서는 분쟁과 분열을 제대로 봉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발판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

김제도 알고 있지 않은가? 2호 방조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단지 면적만 따져 군산이 새만금을 다 차지하려 한다고 전라북도민마저 호도시키지 말길 바란다. 김제가 관할권에 더 이상 법적 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새만금 김제·군산·부안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에 김제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다면 군산시민은 전라북도 발전에 얼마든 협조할 각오가 되어 있다.

본 필자에 대한 비방을 가득 담은 김제시의회의 입장을 되새기니 김제가 이웃도시와 전라북도의 상생발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의지를 고수하여 지금이라도 서로가 새만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도가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군산시민은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로 손을 맞잡아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기에.

(기고일 : 2023. 05. 31.)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김제시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상생협치의 자세를 가져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7월7일자로 취임했다. 청장은 취임사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전북의 미래산업 전략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사업 등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두고 새만금 ‘원점’청이라 비판까지 하며 사업이 좌초될까 우려했는데 새만금 개발이 다시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제는 여전히 새만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며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만금을 이끌어갈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 주장으로 분쟁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김제의 지역이기주의 및 정치적 갈라치기가 극단에 치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만금으로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라북도민의 포부가 발목잡혀 있는 형국이다.

김제는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갖은 궤변으로 관할권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특별지자체 관련 전북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데 이어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왜곡된 역사관, 정성주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마치 극우파들의 억지주장을 보는 듯하다.

특히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고군산군도가 과거 1,200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다며 잘못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김제로 복구하자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각 지자체의 관할권을 교란시키는 한편,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몰상식한 역사 폄해를 자행하고 있다.

현 김제시장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김제시민연대 위원장도 연이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 판결과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의 김제 관할 귀속은 당연하다며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구역이 매립지의 연결 형상 및 연접 관계를 감안하여 평택으로 판결된 것을 따져보면,

새만금 동서도로가 단지 몇 개 번지에 인접해있는 김제보다는 고군산군도 및 군산산업단지와 연접해있으며 군산항 등 관련 시설이 연결되어있는 군산의 관할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니어서 관할권 조정의 대상이 아닌데 굳이 1·2호 방조제 판결 사례를 들어 분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시설도 아니다. 이곳은 현 군산항의 배후항만 사업지이지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등 군산의 행정구역까지 침해하여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새만금 개발구역에서 벗어난 장자도 매립지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김제는 무조건 찢어보는 식으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급기야 이견식 전 김제시장이 나라의 치욕까지 들춰내며 고작 찾아낸 게 고군산군도가 1,200년간 김제 관할이었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이는 일제 침략의 결과 대한민국이 잘살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과 같은 주장으로 아픔의 역사를 이용하여 김제에 유리하게 풀어내고자 한 점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김제가 천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고, 지역의 아픈 상처를 폄하시키고, 아전인수식 법리해석을 해가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가? 작금의 김제의 행태는 새만금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도민과 3개 시군의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갈라치기에 이용한다는 의심만 사게 한다.

이제야 동력을 얻어 박차가 가해진 새만금 개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로 180만 도민들이 몇십 년간 염원했던 도약의 기회를 막아선 안 된다. 만약 새만금 사업이 무산되거나 단지 지역적인 개발에 그친다면 전라북도는 김제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김제는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편협적인 도발행위(소유권 주장)를 멈춰야 한다.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반목과 대립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모든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고 역사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치해야 한다.

(기고일 : 2023. 07. 23.)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언론 기고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을 관할권 분쟁의 허브로 만들지 않으려면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9월이면 개청 10년이다. 전라북도와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였으나 청사진만 제시할 뿐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등 새만금 핵심사업까지 원점으로 돌려놓는 등 소극행정을 일삼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의 경륜과 포부를 감안하였을 때 괄목상대(刮目相對)할 속도를 낼 것이 기대된다. 새로 취임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이 모이는 경제 활력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한민국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사업 중심지로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의지를 보였으며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와 일맥상통한다. 출산율 급감이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이중 전체 인구의 3.4% 수준에 불과한 전북은 매월 1,000명씩 줄어드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메가시티는 인구절벽에 대응한 지역생존의 길이며 새만금에 추진동력을 부여할 해법이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남은 기회의 땅이자 전북비약의 도화선인 새만금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통합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했고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중심축인 3개 시군 중 하나인 김제가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을 주장하여 상호 간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사사건건 쟁송을 일으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도 천년 전 역사까지 들먹이며 군산의 행정구역인 고군산군도 관할권을 억지주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김제가 야기한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가 계속되어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이 무산된다면
김경안 청장이 제시한 새만금 동북아 경제 허브가
관할권 분쟁의 허브로 남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군산이 일제강점기 최대 혜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는 역사편취 자행으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우리 국민까지 모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에는 장자도 매립지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축을 산데 이어, 새만금 사업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새만금신항까지 소유권을 주장하여 3개 시군 간 감정싸움이 치닫고 있다.

우리 군산시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김제의 무분별한 관할권 시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성토하게 되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3개 시군 간 협치가 되고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나서야 한다. 단지 시군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지 말고, 새만금에 주도권을 가진 부처로서 3개 시군과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갖은 쟁송으로 새만금 발전과 기업의 입주를 방해하는 것도 정부에서 혁파해야 할 고질적 규제다.

또한 지난해 1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은 신년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결정이다.”며 “행정구역 갈등이 새만금 개발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에 반하는 김제의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제가 야기한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가 계속되어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이 무산된다면 김경안 청장이 제시한 새만금 동북아 경제 허브가 관할권 분쟁의 허브로 남을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시티 본격 추진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의 젓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의 성공에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총력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기고일 : 2023. 08. 01.)



김영란 시의원 언론 기고

김제시의 흑색선전과 무모한 역사왜곡은 사실일까?

김제시를 방문하면 도처에 군산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수도 없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김제를 벗어난 새만금 방조제에도 군산시를 비방하며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은 김제라고 주장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는 실정이다.

그중 일부는 저급한 수준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필자는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의 만행을 보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김제시의 흑색선전과 역사왜곡을 포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보고자 한다.

우선 김제시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항만조차 김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데, 군산 새만금신항만은 제2호 방조제와 700 미터 떨어진 수역에 위치하며, 현재 연육도 안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항만개발계획상 연육계획이 없었던 항만시설이다.

특히 공유수면내 항만시설이 건설되면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의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듯 새만금신항만 역시 행정구역은 군산시이므로 새만금신항은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공유수면의 관리청과 매립지역의 행정구역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항의 건설 목적과 관련하여 새만금신항만은 김제시의 주장과 달리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물로 인한 수심문제 해결과 국가산단, 지방산단 및 새만금 산단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이다. 따라서 신항만의 관할 구역은 군산시로 단일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군산시는 1899년 군산항이 개항된 이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항구도시로 발전되어 온 반면, 김제시는 항구도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 적이 없으며, 고군산군도의 교통 및 재해 재난업무 등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군산시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항만 역시 관할은 김제시보다는 군산시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후 지금까지 10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가의 행정체제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뒤흔드는 발상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또한 김제시는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설정은 역사적 모순이므로 원천무효이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후 지금까지 10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가의 행정체제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뒤흔드는 발상은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끝으로 김제시는 흑색선전과 역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자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산새만금신항을 포함한 새만금신항만을 마치 김제의, 김제에 의한, 김제만을 위한 전유물인 것처럼 경거망동 하다가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 모두를 공멸(共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도민 전체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다. 이제 김제시는 새만금에 대한 흑색선전을 중지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기고일 : 2023. 08. 02.)



김우민 부의장 언론 기고

왜 “군산” 새만금 신항인가

득룡망축(得隴望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농(隴)나라를 얻고 나니 촉(蜀)나라를 갖고 싶다」는 뜻으로 삼국시대 조조가 농나라를 빼앗자 촉나라도 진격할 것을 주장하는 사마의에게 끝이 없는 욕심은 화를 부르니 그만 만족하자는 조조의 냉철한 판단을 일컫는 고사성어다. 요즈음 김제의 행태에 딱 일러주고 싶은 말이다. 새만금 성공을 위해 전라북도민이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관할권 쟁송에만 여념이 없는 김제로 인해 새만금 전체가 뒤흔들릴 판이다.

김제는 대법원 소송으로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차지했음에도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분쟁을 일으키며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분열을 자행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과 행정을 쏟아붓는 관할권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권과 관련된 이웃 도시들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새만금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장자도 매립지까지 관할권을 주장하여 빈축을 사는 것도 모자라 천 년 전 역사까지 들먹이며 현재 군산 관할인 고군산군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지역이기주의가 도에 넘치고 있다. 특히 군산항의 배후항만 사업지인 군산새만금신항까지도 당연히 김제 관할권인 것처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군산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본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제안했고,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뜻을 모아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모든 공식문서에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이었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이후 새만금신항으로 변질되어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니 분쟁요인 해소를 위해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사항이다.

왜 ‘군산’ 새만금신항인가? 많은 입증 논리가 있으나 필자는 새만금신항 조성 배경과 1·2호 방조제 판결 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군산새만금신항만 조성배경이다. 본 사업은 1982년 당시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 조성 조사를 시작으로 최초 계획되어 1987년 서해안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6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신항만 개발



계획(9개 신항)에 포함되었고 1999년 신항만 건설 및 예정지역을 심의·의결한 사항이다.

인근의 군산항이 금강하구둑의 수문 폐쇄로 상류 60km까지 영향을 미치던 밀물과 썰물이 막히면서 퇴사 누적으로 수심이 7.8m밖에 되지 않아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 신항만 건설사업은 전북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08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군산에서도 2008년 ‘2009 국가예산보고회’당시 중국의 대규모 항만개발에 대비한 새만금방조제 전면해상(신시도~비안도구간)에 26선석의 새만금신항 개발계획과 새만금 종합전시관 건립,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2009년-2013년)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새만금신항 건설사업 관련 채용역 및 실시설계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추이를 짚어가다 보면 군산새만금신항의 조성 목적이 군산항의 연장선상에 있고 군산시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 배경만으로도 충분히 군산의 신항만인 것이다.

다음으로 김제가 본인들 관할권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 2호 방조제 판결당시의 대법원 판례를 풀어보자. 2021년 당시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첫째 “군산시 관할인 가력도가 1호 방조제와 2호 방조제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가력도는 무인도여서 군산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적 관리를 특별히 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뒤집어보면 현재 군산새만금신항과 접한 비안도와 두리도는 유인도이고 군산이 행정적 관리를 하고 있기에 군산 관할임을 뒷받침한다.

둘째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판단하였을 때 군산새만금신항은 고군산군도와 인접해있으며, 군산의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의 인공섬 형태이기 때문에 군산의 경계다.

항만 운영의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다. 1979년 군산외항 1부두가 개항한 이래로 항만을 관리해온 군산은 항만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2023 제1회 대한민국 관광정책대상’ 관광개발부문에 전북 고군산군도 ‘K-관광섬 육성사업’이 선정되는 등 섬 관광산업 정책도 인정받고 있다. 군산항·새만금신항 항만 관리와 섬 관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군산에서 군산새만금신항을 관리해야 한다.

김제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의 정식 명칭을 ‘김제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과연 ‘김제항’ 명칭을 과연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더 이상 정치적 욕심만을 앞세워 새만금이라는 대업을 그르치지 말자. 새만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군산’ 새만금신항과 고군산군도를 ‘군산’에서 함께 관할할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정치적 소용돌이에 주변 시군까지 휩쓸리게 하는 행태를 멈추고 김제 스스로의 주장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분위의 결정을 잠자코 기다리면 될 것이다.

(기고일 : 2023. 08. 10.)



지해춘 시의원 언론 기고

새만금 관할권,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이다

연초부터 시작된 김제의 새만금에 대한 관할권 분쟁 선동으로 전라북도의 공동발전은커녕 새만금을 둘러싼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급기야 김제시의회가 결의문, 5분발언 등을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이 본인들의 관할권이라는 억지주장을 지속하자 지난 5월 군산시민들은 뜻을 모아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를 개최했고, 2,000명의 시민이 모여 김제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에 대해 분노를 성토했다.

이날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안도 주민이 들어있었던 피켓이었다. 이른 더운 날씨에 6km의 거리를 왕복하면서도 주민이 꼭 붙들고 있었던 피켓에는 “우리는 군산시민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있었다. 마음이 나라잃은 듯 한 동안 먹먹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만경7공구, 군산새만금 신항 방파제에 대해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권 조정이 심의 중이다. 이중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에 인접한 곳에 있는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두리도 주민은 하루아침에 김제시민이 되어 대를 이어 지켜온 고장을 잃을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매립으로 인해 생겨난 땅이 아닌, 군산항의 배후항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이 지역이 관할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시작된 인근 옥도면 무녀도리와 비안도, 두리도에 사는 주민들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산새만금신항의 지형적 위치는 옥도면 무녀도리와 비안도(두리도 포함)사이의 군산시 관할인 인공섬으로, 서방파제는 무녀도에서 1.3km, 남쪽 비안도에서 0.9km 떨어졌고 비안도 어선 접안시설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9번지와 연결된다.

이 지역에는 군산시민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요 시설물·전기·상수도·방재시스템 설치, 시내버스 운행,



**평생을 살고 어업을 했던 고향인 군산 앞바다가
김제 앞바다가 되고, 군산시민이 김제시민이 되어
그동안 이용했던 주소지와 관공서가 변경되고
행정시설들이 사라지는 황망함을 겪을 주민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보건진료소 운영 등 행정행위 및 서비스를 군산에서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김제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쟁송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김제는 일제 강점기의 치욕까지 들먹이면서 고군산군도까지 김제시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관할권을 지도에 선만 그으면 조정되는 것으로 단정하며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과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는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생활권에 대한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놓은 것이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대로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 김제도 형식적인 ‘법과 원칙’만 내세운 관할권 가르기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여 이들의 거주 여건, 생계 수단, 생활 행태 등을 살펴보고 당위를 따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평생을 살고 어업을 했던 고향인 군산 앞바다가 김제 앞바다가 되고, 군산시민이 김제시민이 되어 그동안 이용했던 주소지와 관공서가 변경되고 행정시설들이 사라지는 황망함을 겪을 주민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법과 원칙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중분위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할권 검토에 있어서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반의 사안들을 토대로 하여 인근 지역에 터를 잡아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김제는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군산시민을 혼란시키지 마라.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의견을 말살한 채 새만금 대업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김제는 지금이라도 관할권 억지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

(기고일 : 2023. 08. 14.)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언론 기고

전라북도, 이제부터라도 “갈등”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이다

올해 연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새만금에 대한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성토했으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김제는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새만금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입장과 대비되는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주장을 들고 나왔고, 이는 관련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을 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것이 예상되어 필자가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을 총괄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은 여전히 이어졌고, 김제는 이에 힘을 입어 일제강점기 때, 함께 치욕을 겪었던 이웃 도시 군산에 대해 친일도시라 매도하기 이르렀으며 결국 시민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어 지난 18일 천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벌어지고, 10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도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정과 관리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새만금에 대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안건이 올해 한 번도 상정된 적이 없다.

또한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유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안」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라북도가 내년 초 출범할 것이라고 각종 매스컴에 호기롭게 내세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지역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전라북도는 여전히 방관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최근 새만금 갈등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도 않으면서 지난 5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것을 가지고 갈등관리의 역할을 다했다 호도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공갈등이 단순히 위원회 이름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한 3개 시군 간 갈등은 전라북도의 현안 사업이 걸려있기에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경기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관련 시군의 갈등 조정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과 화성의 숙원 사업이면서,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을 도가 직접 파악하고 해결 방책까지 적극 모색하였다. 경기도는 관할 기초지자체의 갈등 사안에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도 충분한 데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밋빛 비전만 앞세우고 굽아터지고 있는 갈등은 외면하고 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관건은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인데도 말이다.

새만금 잼버리 후폭풍 속에서 군산과 김제 간의 관할권 다툼은 분명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거기다 2호 방조제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지, 지난달 개통된 남북도로 등 추가 분쟁 소지가 있는데도 전라북도는 이러한 추가될 갈등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최근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 다툼으로 잼버리가 지번 없는 부지에서 개최되었다며 국회의원과 여론의 질타를 산 적이 있다. 관할권 갈등에 대해 전라북도가 여전히 묵묵부답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제3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동력 확보와 전라북도의 경쟁력 결집을 위해 추진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관할권 갈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사안이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들이 실시한 각종 결의안·건의문, 기자회견, 촉구집회 및 서명부 전달에 일개 시군의 잡음으로 치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갈등이 분열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가 관할권 분쟁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전라북도 분열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경제도시로 우뚝 설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기고일 : 2023. 08. 31.)



김영일 의장 언론 기고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관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잼버리 파행 떠넘기기에 정부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내놓은 명분에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포함된 것이다. 두 시군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김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새만금 3개 시군 중 군산과 부안 출신 도의원 전원은 공동발의한 반면, 또 김제만 빠졌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앞서 김제를 향한 군산 시의회의 악의적인 비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특히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더라도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할권 분쟁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

새만금 죽이기에 대해 전라북도 정치권, 전라북도의회, 각 시·군의회가 성명서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고 있으며, 김제시의회도 지난 13일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상황인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최대 위기에 봉착해있다. 대내외적으로 전라북도민의 단결된 힘을 어떻게든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에 김제는 여전히 땅 타령을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고 삭발식을 하고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명분 중의 하나인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여전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은 누가 봐도 코미디 아닌가?



정부의 전라북도에 책임 씌우기가 잼버리 파행에 이어 새만금 사업에 번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군 간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 예산삭감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둘러댈 것이 뻔하다. 김제는 어떻게든 새만금 추진에 트집을 잡으려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다.

여타의 사례만 봐도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한 새만금 사업 위기는 전라북도와 김제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동안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해 외면만 하지 말 것을 기자회견, 성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분쟁을 일삼는 김제를 수 차례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행위를 문제 삼아 김제는 군산시의회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관할권 주장을 하는 김제에 대해 가만히 있을 군산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누가 있겠는가?

군산시의회는 엄연한 군산의 관할구역과 기반시설인 동서도로·신항만을 빼앗아가려는 김제의 획책에 대해 방어하고 지켜려는 것뿐이었고,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결단력있는 중재를 강력히 요구하여 온 것이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명운을 위해서라면 14개 시군 모두가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할 시국임에도 김제는 군산시의회가 지역을 지키기 위한 과거의 행적을 문제삼아 전라북도의 통합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관할권 시비만 일삼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김제의 미꾸라지 같은 행동에 결단력있게 중재를 못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담보하고 있어 그 무책임함을 현저히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지사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전라북도의 무능한 조정능력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새만금 파국의 당사자인 전라북도가 대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무분별한 행동들이 결국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고 새만금을 공멸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 발전과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김제는 관할권 갈등 조장을 그만두고, 도지사와 전라북도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 상생 공동,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고일 : 2023. 09. 15.)

(3)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 대응 보도자료(2023년)

군산시의회, 전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설명회 보이콧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월 12일 시의회에서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본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여 새만금 메가시티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자 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설명회에 앞서 군산시가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논의를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도가 군산시를 김제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17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북도가 현 상황을 모면하려면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선결정, 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라북도가 아무런 해결안도 세우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며, 지역갈등만 더 일으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김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 동서도로와 군산 신항만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말도 안 되게 주장과 역지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에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설명회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관할권 관련 김제시 주장에 강력 대응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의 온갖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만이 군산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방조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헌신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의 관할권은 군산시임을 천명한다' 기자회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도지사 면담을 가지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우유부단하게 관망만 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히 성토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동서도로 또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기에 군산 관할은 자명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전라북도가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및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월 24일 군산시에 연두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한탄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되었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 ‘조정’ 위원회를 중앙분쟁 ‘조장’ 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나?”며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한편,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시의원 대다수가 분개하여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건의문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하여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언론 브리핑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한 1월 30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3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의장,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원점’ 청이 아니다

군산시의회의 김영일 의장은 경제항만혁신국장 및 새만금에너지과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의 방관을 비판하고 새만금을 퇴보시키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무능함에 한탄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수상태양광 사업 표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무관심 등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역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연사업을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로 논의된 사항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 연계 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새만금 지체사업으로, 최근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재검토 및 방관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새만금청의 유명무실함을 한탄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를 목표로 하여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녀도를 4.9km 구간으로 잇는 새만금 관광의 핵심으로 2024년 개장이 계획되었다. 지난 2019년 6월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선성정 및 타당성검토 용역, 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새만금청의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 돌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으로 2020년 투자협약식이 개최된 SK의 2조원 규모 데이터센터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한수원이 공사비용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다 업무 협약상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등 협의를 총괄해야 하는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자철회까지 이어질 새만금청의 무능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냐고 한탄했다.

이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과 지역사회에서 적극 건의하여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였는데, 새만금청은 개발에 대한 독립적 권한과 개발사업 및 인허가를 틀어쥐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곳이 되었다며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라북도에 각종 권한 및 업무를 이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에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으로 2050년까지 100% 개발을 마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진 새만금 사업이 법과 규제만 앞세운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부지만 남겨둔 채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새만금청은 그동안 공들여놓은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새만금 ‘원점’청이 아닌, 새만금 ‘개발’청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는 2월 임시회 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상기하며 “새만금청과 전라북도가 아무리 방관하여도 우리 군산시민만은 뚝뚝 뭉쳐야 한다”며 “군산시민과 함께 우리의 땅,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군산시의회, 시민·의원·시 하나되어 “군산새만금신항” 지키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소회의실에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새만금에너지과장, 항만해양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동서도로·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하며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법률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새만금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를 위해 토론회를 자주 해야 한다”며 “역사·행정 각계 전문가 등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추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군산새만금지킴이법시민위원회 시민운동과 잘 연계해야 한다”며 “우리가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 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집행부와 의원들은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태 의원은 새만금 2호방조제 매립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대해 물은 후 군산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우리시의 논리가 여러가지 지리적 특성, 관할구역 공유수면 위치 등 인데 이미 방조제 관할 구역에 대한 결정을 보면 이미 진거나 다름없는 결론이 나와 있고, 또한 경제적 손실 관련 논리도 각 지역의 입장일 뿐 이라며, 방조제의 결론과 상관없는 별도의 논리를 개발해야만 최악의 상황에서 신항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군산 관변단체나 군산시 의원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신항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만금에 대한 업무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고 알아왔던 직원들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가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F팀에 각 상임위 의원이 2명 이상씩은 들어가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영토를 빼앗긴 장군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빼앗긴 1, 2호 방조제가 되찾을 희망이 없다면 보상받을 사안이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 한편, 군산새만금신항 초기계획 시 신항만 명칭에 “군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기술센터 용역 심의 때 2호 방조제를 김제 관할로 치부하여 용역대상지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며 집행부에서조차 총력을 다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구 의원은 앞으로 TV 새만금 관할권 관련 토론회에 나갈 때는 반드시 검증된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김경식 의원은 대응 논리를 바꿔야 한다며 군산시는 항만을 관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군산시에서 관리 하면 전라북도에 더 이익인데 과연 김제는 항만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행안부·해수부·전북도의회 의견을 꼭 들어서 반박할 논리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고 송미숙 의원은 군산시 대응이 한참 늦었다며 김제시에 비해 군산시의 논리가 부족하여 자문을 꼭 구할 것을 주문했다.

최창호 의원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생기면 2만 5천명이 거주할 것이고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5만명 이상으로 보는데 군산시민이 가서 거주할 것으로 본다며 군산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히 우리가 사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날 발족된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는 군산시의회가 작년부터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지난 3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군산시민의 피와 땀인 새만금을 지킬 수 있도록 발대식을 서두르도록 재촉한 바 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에 죽고 새만금에 살겠다!

- 군산시의회의 강한 의지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 성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은 반드시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 뜻을 모아 언론브리핑에 이어 도청 방문, 5분발언 및 결의안,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에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한 결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날 출범식 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겸하여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지금이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출범식에서 김영일 의장은“안일한 대처로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넘겨준 것이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전라북도가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새만금을 가지고 지역갈등만 조장할 것이냐?”며 “전북자치도로 가는 입장에서전라북도 통합을 위해서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초 군산시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군으로 가자고 했으나 김제가 난데 없이 선(先)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김제는 2호 방조제까지 가져갔음에도 이제는 신항만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며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순신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지켰듯이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자”면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승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 승리하겠다”고 하였다.

앞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승우 위원장도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앞으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한 군산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관할권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해 새만금 지키기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시민, 집행부와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를 위한 군산시·전라북도 노력 촉구

- 집행부와의 긴급 간담회 실시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등 집행부와 연달아 회의를 열고 시의 강력한 대응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3월 21일 집행부와 긴급간담회에서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중재 원칙을 가지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선(先) 결정 후(後) 개발이라는 엉뚱한 논리에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제의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에 이어 군산에서도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관할권 문제가 시민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도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두 지자체가 대형로폼에 큰 비용을 들이면서 분쟁을 하는 것을 도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묻고 싶다. 전라북도 소관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10년째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도가 도민의 화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름만 바꾸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청은 전라북‘시’청이 아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도내 현안사업이 무산 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군산시도 마찬가지이다. 순간순간 넘기면 된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행정으로는 지역의 살길을 찾을 수 없다.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의회에 권한을 넘겨라. 이승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논의하여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군산시가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개최된 의장단 회의에서도 “우리 시가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 현수막 게첨 등 시민 모두가 현재 위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타 지역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중지를 모으는 등 벌떼처럼 달려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들에게 시장직을 내걸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못할 것이 없다. 도의 강력한 입장 촉구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발전에 더욱 힘쓰겠다!

- 서동수, 서동완, 윤신애 의원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에서는 3월 27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동수·서동완·윤신애 의원이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된 후 군산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의 개발 촉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언·자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신항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대부분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해양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종합 항만으로 2040년까지 신시 배수갑문~비안도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인공 섬 형태의 5만톤급 9개 선석이 조성되게 되는데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빼앗긴다면 바다의 항만, 해역까지 빼앗기게 된다”며 과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새만금신항을 빼앗기면 어업권 등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시민의 이익과 군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완 의원도 “관할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나 생각해도 군산 관할이 맞다고 할 정도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도 “앞으로도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 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적극적으로 ‘군산새만금신항’을 알렸고, 전라북도·군산시의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의장, 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통합 방안부터 제시하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월 10일 전북도청 자치행정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산, 김제, 부안의 통합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군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의회에서 중단시킨 이후 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자체가 관할권 분쟁을 계속 지속하는 상황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별개로 추진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군산 시민의 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원론적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만을 외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김제의 ‘선결정·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중재했다면 두 지자체가 갈등의 골이 이 지경까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해서 ‘김제시의 중분위 관할권 결정 신청 철회’가 선행되고 각종 분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 “경상남도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가 2010년 통합되었는데 통합 전 인구수는 창원 50만 명, 마산 40만 명, 진해 17만 명으로 경남 내 중소도시였으나 통합과 함께 11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면서 “3개 시군도 군산시 인구 약 27만, 김제시 약 9만, 부안군 약 6만으로 세 도시가 합쳐지면 40만 이상의 도시가 되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인구 27만의 익산시까지 합쳐진다면 최소 70만 이상의 메가시티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전주~완주’통합의 축과, ‘군산~김제~부안’통합의 두 축을 중심으로 창원과 같은 성공적인 광역기초자치단체 구성을 위해 새만금광역청사 건립 지원과 개발 인센티브, 정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3개 시군이 점진적인 개발과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3개 시군이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의 방향으로 나아가간다면 동북아 중심이 되는 새만금 메가 시티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라북도는 통합의 당위성과 미래 전라북도의 발전 청사진을 가지고 신념 있는 비전과 확실한 통합 방안을 소신 있게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앞서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추진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여 새만금 메가시티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군산시 설명회는 시의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유는 군산새만금 신항만 및 동서도로에 대하여 김제시의 선 관할권 결정이라는 명분 없는 권리주장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

-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대응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월 2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관할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에 적극 협조할 것에 대한 뜻을 모았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그간 대응해 온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집행부와 6월에 있을 중앙분쟁위원회 3차 회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논리 개발 및 자료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 열리는 대시민 홍보 행사로 5월 13일(토)에 개최되는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에 주관단체인 (재)군산시걷기연맹과 걷기코스 및 참여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가는 3km와 왕복으로 돌아오는 6km 코스로 진행될 예정으로, 염원메시지 리본달기 행사와 신시광장 포토존, 신시광장탑 단체사진 등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군산새만금신항을 사력을 다해 지켜내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무장했다. 앞으로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발전을 위해 박차를 힘껏 가할 것이다.”며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결집시킬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행사로 군산새만금신항이 우리 군산의 관할임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군산시의회, 김제야 넘보지 마라~ 군산시민이 우리땅 걸으며 증명했다!

-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참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5월 13일 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에 참여하여 다시한번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2023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는 (재)군산시걷기연맹에서 주관하며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가는 3km와 왕복으로 돌아오는 6km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염원메시지 리본달기 행사와 신시광장탐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에 대한 군산시민의 염원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야미도에서 신시광장까지 걸었고, 새만금33센터 근처에서 “군산새만금신항” 피켓을 들며 지나가는 차량에 홍보하는 등 군산새만금신항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개막식에서“군산새만금신항은 명백히 군산 땅인데 자꾸 김제에서 넘보고 있다”면서 “누구보다도 새만금의 발전을 바라는 27만 군산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걷기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국에 보여주자”고 하였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도 “군산새만금신항이 우리 관할인데 왜 우리가 여기 군산새만금신항걷기대회에 나와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면서 “120년간 관리해 온 우리 구역인 만큼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자”고 하였다.

앞으로도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 관할권 대응 관련하여 조례안 발의·건의안등 채택하여 관계기관 송부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6일에 있을 새만금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할권 사수와 새만금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의원 간담회

- 군산새만금신항 사활을 걸고 지켜내자!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6월 14일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시장 등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그간의 대응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도 의회에서 재촉하고 나서야 발족하고서는 그 이후에 활동이 없다. 김제는 전문가 학술대회와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군산 새만금신항 관할권 논리개발에 여념이 없는데 군산은 오합지졸인 모양새다”며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판결되니 관광레저 용지 등 내부 매립지들도 김제 관할로 여겨지는 추세를 보면 느끼는 게 없나? 방파제를 뺏으면 군산새만금신항도 지킬 수 없고, 해상경계선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산의 바닷길이 다 빼앗기게 되고 지역 항만종사자들과 어업인도 생업을 잃게 되는데 모든 사활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집행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김제는 항만 전문가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군산새만금신항 물동량 확보방안과 특성화 전략을 구상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마치 본인들의 관할권인 양 홍보하고 다니는데, 이와 비교하여 우리 시 행정은 매우 소극적이다”며 “의회는 어떻게든 군산새만금신항을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미진한 태도를 보이니 지역현안에 서로 공조해야 할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2축도로와 수변도시 등 새만금 관련 기반시설 및 권역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김제는 관할권에 대해 개발연구 및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요구하면서 보도자료를 내니 외부에서는 김제 관할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 시도 관할권 등 매립 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역 등을 실시하고 개발계획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한다”제안했다.

설경민 의원은 “중분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회도 노력해야 할 부분을 하고 시장도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모두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도 “3월에 발족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아무런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시민 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다”고 지적하자 설경민 의원은 범시민 위원장의 소극적 활동을 지적했고, 송미숙 의원은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동완 의원은 “2호 방조제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김제가 일방적으로 설치해놓은 김제 표기 팻말이 산재해있다. 집행부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등에 항의해야 하고 우리 의회도 이에 대해 단체행동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단 한평의 땅도 김제에 빼앗길 수 없다.

- 4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새만금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가져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월 31일 전북도청 정문에서 대한노인회 군산지회(회장 이래범)에서 주최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4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군산시 이·통장 협의회, 군산시 새마을회, 군산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4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전라북도지사에게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행위 규탄」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지역의 큰 어르신인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전라북도청 앞에 모인 것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민의 마음이 더 뜨겁게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며 “김제의 무분별한 관할권 주장으로 인해 야기된 분쟁이다. 총칼만 안 들었지, 군산과 김제는 영토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김제는 2호 방조제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마저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며 “막가파식 땅 싸움에 재미가 들렸는지 이제는 천 년 전 역사와 일제강점기 치욕까지 들먹이며 고군산 군도까지 본인 관할권이라고 한다. 이런 김제에게 군산새만금신항을 빼앗기면 군산의 운명이 바뀐다”고 토로 했다.

또한 “김제가 8월에 개최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군산 땅인 군산새만금신항을 김제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길 때처럼 앉아서 당할 수 없다. 김제에게 단 한 평의 땅도 강도 바다도 약탈당할 수 없다. 전라북도지사는 명확하게 군산 관할이라고 결론을 내리든지,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을 멈추게 하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의원, 집행부, 시민이 뚝뚝 뭉쳐 새만금을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지켜내 전북의 도약과 새만금의 위대한 미래를 창조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집회를 주최한 이래범 회장도 “무더위 폭염에도 군산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모였다.”며 “군산의 행정력으로 관리하는 비안도·두리도 사이에 건설되어 군산 관할임이 틀림없는데도 김제의 행태는 일본보다 더하다.”며 군산이 없으면 군산새만금신항도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의회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결집시킬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개최에 이어 이번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분쟁을 조장하는 김제의 갈라치기식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제재할 것을 전라북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에 군산의 운명이 달려있다!

-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간담회 참석 -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8월 4일 개최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집행부의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현안 설명을 듣고 집회 추진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에 대한 군산시 대응 논리와 현재 상황을 위원들에게 알리면서 범시민위원회 집회 개최와 중분위 대응을 위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협의했다.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대한노인회 군산지회, 군산새마을회·이통장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 400여 명이 모여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며 “군산시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산시민들이 나서서 군산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자”고 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도 “김제가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빼앗아 갔음에도 오히려 신항만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특히 무녀도·비안도 사이 신항만방파제를 빼앗기게 되면 해양경계선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신항만과 나아가고군산군도까지 관할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을 군산이 조성했음에도 김제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소유권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3개 시군 통합이 안되니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김제의 선 관할권 주장은 내버려둔 채 3개 시군 통합을 외치고만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나서서 김제의 관할권 주장을 철회시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군산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우리 시민들도 목소리를 같이 높여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했으며 공동위원장들과 각 분과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사수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위원회와 함께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산시의회, 새만금관할권에 대한 군산 입장을 전달하다

-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건의문 전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8월 8일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서은식 의원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공동위원장 대표 외 공동위원장·각 분과장 등 12명이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행위” 규탄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지난 4일 개최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간담회에서 전라북도의 명확한 입장 제시와 중재를

촉구하기 위해 7월 31일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이후 재차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래범 공동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의원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관할권 대응을 위한 전라북도의 중재를 촉구하고자 도청에 방문하게 되었다”며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일 의장도 “새만금이 3개 시군 땅따먹기 전쟁터가 된 것은 전라북도의 방관 때문이다”라면서 “막가파식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김제에 대해 전라북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의 도약과 새만금의 위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이었는데 행사 파행으로 새만금의 이미지가 전세계에 부정적으로 비추어질까 우려스럽다”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함께 대응하면서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위해 노력하여 새만금을 다시금 긍정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시의회, 역전의 명수 군산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 7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새만금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가져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월 17일 군산새만금신항 인근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주최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7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 어촌계, 항만관계자, 목회자 등 종교단체 지도자 7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고, 시민들과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의 뜻을 함께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고군산의 중심, 새만금의 중심인 군산새만금신항 현장에 와보니 더 가슴이 울컥한다”며 “신항만 방파제를 뺏기면 군산새만금신항도 빼앗기고 바다의 경계선도 다시 정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우리 군산의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나아가 군산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며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역사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군산새만금신항을 뺏으려고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군산시민들이 뭉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제시는 3개 시군의 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워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에서 3개 시군이 하나로 뭉쳐 미래를 대비하고 전북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가 11-10 짜릿한 역전승으로 37년 만에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통산 4번째 우승을 군산시민들에게 안겼듯이 우리 군산시민도 뚝뚝 뭉쳐 역전의 명수 군산의 저력을 보여줘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하자!”고 했다.

한편 이날 군산새만금신항 인근 해역에서는 군산 어민들이 “군산새만금신항을 지키자”는 등의 문구의 현수막을 어선에 부착하고 김제시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도발을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군산시의회, 군산시민과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에 총력!

- 1,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새만금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 가져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8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주최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1,1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정안전부 제4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맞춰 군산시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세종시까지 와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26만 군산시민의 가슴을 녹이지는 못한다. 우리 시민들은 군산을 지키고 새만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어제도 군산새만금신항만 앞에서 약 700여 명의 시민, 어업인, 항만관계자 등과 집회를 가졌다”며 “김제가 무조건 찢러보기식으로 새만금을 김제 관할이라 억지

주장을 하는 데에 군산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만은 군산땅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발전과 더 나아가 전북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며 “전라북도는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도 “2호방조제를 가져갔음에도 새만금신항마저 넘보는 김제시에 대해 군산 시민들은 더이상 군산 땅을 뺏기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은 군산시민의 뜻을 모은 범시민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SOC예산 삭감 규탄 범시민 집회

- 4,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대규모 집회 및 12명 의원 삭발 단행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9월 19일 군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새만금 SOC예산 삭감 규탄 범시민 집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4,000여 명의 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군산시민 모이자! 새만금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전제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사전에 시민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최연성 고문과 홍용승 공동위원장의 자유발언과 이래범 공동위원장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삭발식에는 김영란·이연화 등 여성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일 의장·김우민 부의장·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김경식 윤리특별위원장·박경태 의원·서은식 의원·양세용 의원·한경봉 의원 등 군산시의회 의원 12명과 범시민위원회 이래범 공동위원장·문남철·박충기·이희풍·김용화 등 5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여 새만금 사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래범 범시민공동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발언을 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상정할 때는 새만금 예산이 모두 반영되었는데, 잼버리 이후에 정부가 예산을 거의 삭감했다”며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킬테니 군산 시민들이 힘을 받쳐달라. 군산시민이 하나되어 새만금을 사수하자”고 성토했다.





김영일 의장은 “늦더위로 아스팔트의 열기가 뜨겁지만 군산시민의 열정과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겁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기필코 이길 것이다.”며 “지금까지 있지도, 보지도 못한 예산삭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새만금에 와서 동북아의 신허브를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오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균형발전을 시킬 책임이 있는데 행사를 잘못된 분풀이로 예산을 대폭삭감하는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이는 전라북도를 죽이겠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다. 정부는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라북도민의 자존심과 희망을 짓밟고 있다”며 “군산시민은 역전의 명수라는 힘이 있다. 군산시민이 이런 정부에 더 이상 짓밟힐 수 없다. 짓밟는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 중에 군산·김제 간 관할권 갈등도 있다는 총리의 발언이 있었다. 군산이 언제 김제 땅을 군산 땅이라고 한 적이 있던가? 김제가 천 이백 년 전 역사까지 들먹이며 새만금은 물론 고군산군도 까지 김제 관할권이라고 주장해서 관할권 갈등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며 “이 모두가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 때문이고,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새만금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군산시민은 물론 전라북도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만 천하에 천명한다”며 “역전의 명수, 군산시민이 뭉치면 기필코 승리한다. 새만금은 30년 이상 군산시민의 피땀으로 개발해온 만큼 새만금 SOC예산을 복원하고 새만금 관할권도 푹푹 뭉쳐서 지켜내자”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위기 극복 지자체 등 공동대응방안 마련 및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9월 4일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으며 9월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새만금 관할권 사수와 더불어 새만금 관련 예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대응에 총력을 다하자!

- 새만금 관할권 대응을 위한 의원 긴급간담회 개최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0월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SOC 예산과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별도라는 입장에 한 목소리를 모으면서 전라북도지사가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달에 있을 제5차 중분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하여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차후 군산과 김제 갈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군산시민의 의지를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기로도 결의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김영일 의장은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 문제다. 마무리를 잘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중분위에서 결론을 내버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 막판 스퍼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과 관할권 문제가 목전에 와있는 시점에서 두건을 합해서 대응하는 게 결과적으로 관할권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두건을 각각 별개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인지 분명한 방향성을 좀 정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두건을 묶는 게 오히려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도 “본 의원이 문동신 전 시장 때 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시장과 집행부는 당연히 군산 관할로 결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 대응만 똑바로 했으면 됐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태만과 무능으로 관할권을 빼앗겼다”며 “집행부의 이러한 안일한 자세는 지금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삭발투쟁까지 감행하면서 새만금 관할권에 고군분투하는데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군산시의회만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성토하고 군산시 집행부는 마치 새만금 관할권이 김제로 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양새다”며 집행기관인 시장과 집행부는 요지부동이고, 오히려 견제기관인 시의회가 관할권 현안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식 의원은 “전라북도지사는 중재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전라북도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시군에게 패널티를 적극 주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도 중분위 상정을 중단시켜놓고 차후에 시작한다든지 등의 제안을 도지사가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 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나종대 의원은 “우리가 삭발투쟁하고 시위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먼저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게 해야 한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은 별개인 만큼 우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송미숙 의원은 “굶어 죽어도 새만금 관할권이 먼저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광일 의원은 “도에서 새만금 관할권에 예산문제까지 끼워 넣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전라북도지사가 중분위 상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자 의원도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장단에서 전라북도지사와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란 의원은 “삭감된 예산 복원, 새만금 관할권 등 시일이 급박함에도 전라북도지사에게 그런 절박함이 없다”며 “우리 군산시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투쟁을 해야 하고, 단식투쟁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한세 의원은 “다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와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의회, 집행부, 법률회사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우종삼 의원은 “명분을 가지고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차후 결과에 대해 군산시민들이 지탄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까지 노력하자”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삭발한 것은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더 이상의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만 강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라북도의 관할권에 대한 입장정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동수 의원은 “예산이 우선이냐 관할권이 우선이냐 이 부분보다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우민 의원은 “군산의 이로운 결단을 위해 관할권 문제는 예산 문제에서 분리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세자 의원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한대로 새만금 SOC 예산문제와 관할권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삭발식하고, 세종시에서 시위도 해왔고, 도청에 쫓아갔어도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았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영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님들 말씀대로 전라북도 새만금 SOC 예산과 관할권 문제는 별도이다.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는 각오로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SOC예산 삭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군산의 운명이 걸려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다. 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시민과 함께 관할권 사수를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전북 제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을 새만금 기본 계획에 틀림없이 반영하여 대통령 공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내년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 SOC 예산의 78%가 삭감되는 동안 그러한 사실을 인지나 하였는지 의문”이라며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더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관할권 문제 해결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관할권 문제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전북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전라북도와 도지사에게 새만금 관할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분노하고 있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명확히 도와 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 관할권 우리가 사수하자!

- 범시민 가두서명 운동에 군산시민 열띤 호응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0월 12~13일의 일정으로 새만금 관할권 중재에 대한 전라북도 결정 촉구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민들이 열띤 호응을 하고 있어 화제다.

서명에 참여한 군산시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도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관할권 분쟁을 외면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전시 행정을 성토했다.



또한 정부가 새만금 예산삭감 및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들고 있는데 전라북도지사는 대체 무슨 이유로 새만금 관할권 중재를 회피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한 시민은 “요즘 뉴스에 국무총리가 관할권 다툼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하고 김제는 새만금 사업마다 관할권을 주장하던데 전라

북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른 시민도 “전라북도가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라는데 서로 다투기보다 상생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라북도가 말로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외치지 말고, 관할권 싸움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군산시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며 지역 최대 위기의 시대에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시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중대 경제건설위원장도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군산의 발전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 투쟁을 펼쳐나가겠다. 새만금을 피땀흘려 이뤄낸 군산시민의 불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 및 전라북도 적극 중재 촉구 총력 투쟁

- 새만금 관할권 전북 결단촉구 집회 참석 및 8만여 명 서명부 전달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새만금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 등)와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 성토 및 관할권 사수를 위한 범시민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관할구역 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 집회에 참석했다.

본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군산시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자유발언, 구호제창, 성명서 낭독 등으로 순으로 이뤄졌으며, 8만여 명의 군산시민의 뜻을 담은 서명부를 전라북도지사에 직접 전달하였다.

이번 투쟁에 모인 천여 명의 시민들은 정부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빌미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및 SOC예산 대폭 삭감을 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을 방관하고 있는 전라북도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 외면과 김제의 관할권 선동으로 인해 빼앗길 수 있는 새만금 관할권을 사수할 것을 다짐하며, 전라북도지사는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이래범 군산새만금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SOC 예산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변경 등 전라북도와 새만금 사업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전라북도지사는 리더십 부재와 무능력한 행정만 보여주고 있다”며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단초인 관할권 중재조차 외면한 전라북도의 무책임함을 성토하며, 전라북도지사는 관할권 분쟁으로 갈가리 찢겨져 있는 전북의 통합 및 상생방안을 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용승 군산새만금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시의원들이 도지사를 만나러 작년에 4번을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만나 주지 않았다. 이는 군산시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다. 전라북도지사가 관할권 분쟁을 외면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김영일 의장은 “우리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도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의 계획을 다시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라며 “이제 전라북도와 도지사가 나서서 새만금의 미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 26만 군산시민과 23명의 의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 기필코 새만금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촌동 롯데몰과 수송동 롯데마트 및 은파 호수공원 인근 등 시내 곳곳에서 가두서명 운동을 벌여 시민들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중재와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대한 뜻을 모았다.

군산시의회,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전북도민,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 5,0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을 규탄하고, 예산 복원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새만금은 국가사업으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새만금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에도 목청을 높였다.

김영일 의장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라며 “하루 빨리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새만금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 9월 4일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 규탄 및 전북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 9월 8일 군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예산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 9월 19일 새만금 예산삭감 규탄 범시민 집회와 삭발투쟁 전개하는 등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 군산시민과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에 총력!

- 6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새만금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 가져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1월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래범 등)와 군산시의회가 주최한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600여 명의 시민과 김영일 의장 등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모여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에 대한 군산시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집회에서는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의 발언과 강임준 군산시장의 인사말, 홍용승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의 자유발언에 군산새만금지킴이범시민위원회·군산시의회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이래범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와 전라북도는 우리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또 다른 쟁송을 야기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을 잠정보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장도 “긁은 날씨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세종시까지 방문한 것을 봐도 전라북도의 방관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와 울분이 얼마나 사무쳐있는가를 알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민 여러분이 아다시피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주는 뼈아픈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김제는 군산새만금신항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제에 신항만이 넘어가면 고군산군도도 김제땅이라 우길 것이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이것을 누가 중재해야 하는가. 바로 정부와 전라북도 지사이다. 군산시의회에서 수 차례 군산과 김제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새만금 3개 시군이 통합하여 미래로 갈 수 있게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으나 지역 최대의 위기에도 전라북도지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다른 도시는 더 힘을 모으고 합쳐서 메가시티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전라북도가 서로 통합해서 전라북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군산이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어 우리 땅도 지키고 전라북도를 하나로 만드는 선구자가 되자”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정부가 새만금 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상정되어 있는 중앙분쟁조정 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잠정 중단해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제는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중단하자는 군산시의회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16일 집회를 벌이는 등 새만금 성공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회,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향해 쟁걸음!

-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담회 실시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2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하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에서 새만금 잼버리 여파로 인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한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 등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군산 시민을 대표하여 청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김영일 의장은 “오늘 이렇게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님을 만나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먼저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새만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새만금 관할권 문제다. 군산의 입장은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내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항만 방파제까지 중분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신항만까지 김제에 빼앗기면 고군산군도도 김제 관할이라 우길 것이다. 새만금의 모든 인허가와 개발권을 새만금청이 가지고 있으니 이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새만금청이 정부기관인 만큼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위해 개발을 먼저 하고 관할권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잼버리로 인해 예산이 깎인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오히려 새만금이 새롭게 재탄생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어가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른 도시들은 잘 살아도 더 잘살기 위해 합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경제·인구가 최하위임에도 땅 가지고 싸워서 되겠냐. 특히 통합은 군산·김제·부안과 더불어 익산까지 광범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시 새만금 야미도 앞 60만 평의 관광개발용지를 관광주거 복합개발용지로 변경하여 120만 평 규모로 확대 지정해 개발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변경시 꼭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김경구 의원은 “청장님이 오신 후 새만금에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을 시민들도 느끼고 있다.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 등 고군산군도 내 새만금지역을 속도감 있게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새만금에 5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크게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안면도처럼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종대 의원은 “청장님 마인드를 보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새만금에 10조원 내외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공항 등 기반시설이 조속히 구축되어 새만금이 발전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일 의원은 “우리 도주민들이 새만금 개발구역으로 묶여서 15년 이상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청장님이 새만금을 위해 국비를 좀 많이 투자해주시고 특히 고군산군도 내 새만금 지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서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고군산군도에 살고 있어 새만금 발전을 피부로 느껴왔다. 사업추진을 해오며 몇 번의 변화를 겪었는데 변화 속에 주민들은 얻은 게 없다. 고군산군도도 새만금개발지역으로서 개발이 빨라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을 잘해서 사업추진을 잘 이끌어 나가주길 바란다. 군산시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식 의원은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칭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목적이 새만금 지역의 속도감 개발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동안 새만금청의 소극행정으로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 언제 될지 의문을 가졌다. 오늘 청장님을 만나보니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에 첫 삽을 뜬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을 지켜봤다. 새만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온 데 울분이 있었다. 청장님과 군산시, 그리고 군산시의회가 소통하면서 새만금을 크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세자 의원은 “새만금을 잘 아시는 청장님이 오셔서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도 새만금이 발전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강조하신 3대 허브를 중점적으로 조성해달라. 전라북도의 미래는 바로 새만금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새만금 개발한 지 30년이 넘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복원과 새만금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투쟁을 했다. 예산편성권이 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전북 홀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역차별 없는 예산 반영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군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LS그룹이 대규모로 2조 2천억을 투자하는 등 새만금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식품허브, 컨벤션허브)를 중점으로 새만금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여 “새만금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저 또한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노력할 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사업기간을 앞당겨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 새만금 대응 사진첩



2023. 1. 11 군산새만금신항 현장방문



2023. 1. 11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언론브리핑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



2023. 1. 11 군산시의회 의원총회(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 대응 방안 논의)





2023. 1. 30 군산시의회 의원 및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언론 브리핑 및 도지사 면담 요청
(군산새만금신항·동서도로의 관할권은 '군산시'임을 천명한다)



2023. 3. 9. 군산시의회 의원총회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대응 방안 논의)



2023. 3. 9. 군산시의회,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식 참석





2023. 3. 27.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서동수, 서동완, 윤신애 의원)



2023. 5. 13.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걷기대회 참여





2023. 6. 14. 군산시의회,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관련 의원 간담회



2023. 7. 27.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전북도의회 브리핑
[김제의 무분별한 새만금 관할권 촉구 규탄 성명] 기자회견



2023. 7. 31.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전북도청 정문, 400여 명 참석)





2023. 7. 31.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
(전북도청 정문, 400여 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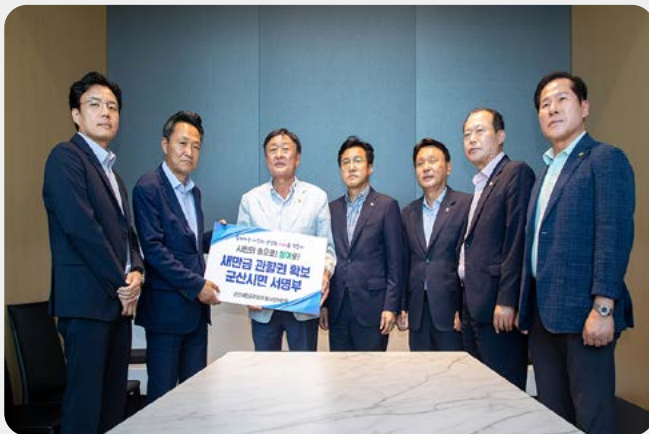
2023. 8. 4.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간담회 참석



2023. 8. 8.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김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 행위 규탄 건의문 전북도청 전달



2023. 8. 17.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군산새만금신항 인근, 700여 명)



2023. 8. 18. 군산시의회, 범시민서명부 전달





2023. 8. 18.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집회(세종정부청사 앞, 1100여 명)



2023. 9. 4.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언론브리핑
[정부의 무분별한 새만금 예산삭감 및 전복 죽이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군산시민 뭉치자! 새만금을 지키기 위하여!



전북도민 30년 염원 담긴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



2023.9.19.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 삭발투쟁





2023. 10. 12~13. 군산시의회, 범시민가두 서명운동 전개(전라북도 중재 촉구)



2023. 10. 16.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북 결단 촉구 집회



2023. 11. 7. 군산시의회,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결기대회 참석
(국회의사당)



2023. 11. 17.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범시민위원회 새만금 행정구역 사수를 위한 집회
(정부세종청사, 군산시민 600여 명)



2023.12.5. 군산시의회, 새만금개발청장과의 간담





[시민특집]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

1) [홍보기자단] 군산시의회에 보내는 응원메시지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김정일

'새만금=군산' 이라는 공식은 불변의 법칙!

군산시의회와 군산새만금지킴이 그리고 홍보기자단으로

군산을 응원하고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예산 정상화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백수경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으로

새만금 개발이 완료된 그대 우리 가족과 함께

군산 새만금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군산 새만금 화이팅!

군산시의회 화이팅!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김수호

군산시의회 의정소식지 첫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의정소식지도 발행하고, 홍보기자단 활동도 하고

군산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관할권을 위해

노력하는 군산시의회를 응원합니다!

군산의 미래를 위해 화이팅!!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이선옥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군산시의회!!
 새만금 관할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분들!!
 힘내시라고 짧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응원합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전진희

군산에 살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지 꽤 오랜시간이 지난거 같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개발 부지 주변을 지날때마다 많이 개발되어 군산이 더욱 발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거 같은 희망이 생긴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걸
 군산시의회 집회 보도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민으로 새만금은 군산이라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힘써주세요!
 홍보기자단으로 '새만금은 군산'
 응원합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박상미

홍보기자단으로 기사작성을 위해 전라북도 도청 앞 집회에 참석하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군산시의회 의원님들과
 군산새만금지킴이, 군산 시민분들이 노력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응원합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고경곤

군산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발행하는 의정소식지에 축하 인사말과 응원을 보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를 응원합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김은경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노력!!

홍보기자단으로서 많이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민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백윤정

군산시의회 화이팅!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 화이팅!

새만금 관할권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회 여러분 화이팅!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이복희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군산을 위해 시의원님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는걸
다시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읍 한해는 새만금 관할권을 위해 노력한!
군산시의회를 응원합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전윤실

의정소식지에 홍보기자단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이네요.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조아현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한 군산시의회 홍보기자 입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군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의정소식지를 만들어 군산시의회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모두를 응원하며, 2024년 갑진년 용의 기운을 받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2) [홍보기자단]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 ○크뉴스

작성자 : 박상미

새만금관할구역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크뉴스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전라북도청 앞 집회를 가져**

2023년 10월 16일 (월) 오후3시부터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약 한시간 정도의 평화적인 집회를 가졌다.

"○크뉴스는?"
5(다섯)컷으로 이루어진 군산시의회 홍보뉴스입니다.
군산시민이 오케이 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할구역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크뉴스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와 전라북도청 앞 집회를 가져**

2023년 10월 16일 (월) 오후3시부터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약 한시간 정도의 평화적인 집회를 가졌다.

"○크뉴스는?"
5(다섯)컷으로 이루어진 군산시의회 홍보뉴스입니다.
군산시민이 오케이 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할구역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크뉴스




'군산 시민의 뜻을 담은' 서명부 전달

군산시민의 새만금을 지키기 위한 8만여명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서명부를 김중훈전북부지사에게 전달하였다.

"○크뉴스는?"
5(다섯)컷으로 이루어진 군산시의회 홍보뉴스입니다.
군산시민이 오케이 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할구역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크뉴스



"다시는 군산땅을 빼앗기지 말자!"

"○크뉴스는?"
5(다섯)컷으로 이루어진 군산시의회 홍보뉴스입니다.
군산시민이 오케이 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만금관할구역관련 전라북도 결단촉구집회
○크뉴스



"더 많은 군산시민의 관심이 필요"

"○크뉴스는?"
5(다섯)컷으로 이루어진 군산시의회 홍보뉴스입니다.
군산시민이 오케이 할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홍보기자단]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에서 군산시의회의 범시민 서명운동

작성자 : 김미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군산시에서는 다양한 가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3일 ~ 10월 14일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군산시 평생학습인의 큰 잔치인 『2023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이 있었습니다.

2023 평생학습한마당은 『군산! 평생학습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올해 같고 닦은 기량을 공연과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입니다.



배움의 결실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에 군산시 시장님과 군산시의회의 의원님들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이날 군산시의회는 평생학습한마당 행사의 축하와 함께 12~13일 양일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전라북도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 진행했는데요.

이들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조촌동 롯데몰과 수송동 롯데마트 주변, 평생교육한마당이 진행되는 은파유원지 일대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새만금 관할권 관련 전라북도 결단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은 왜 하는 걸까요?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정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속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검토 한다는 기사들을 보셨죠?

이영?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이 이유 중의 하나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결을 위해 군산시의회에서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와 함께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에 대하여 3개시군(군산, 김제, 부안)의 상생방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시해 달라는 뜻을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원님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행사 방문객들에게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해 주며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었네요.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김영일 의장님을 선두로 의원님 한명 한명 호명으로 시민들에게 인사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군산시 평생학습한마당의 감회를 말하고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새만금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과 투쟁하여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라고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막식 퍼포먼스로 우리의 꿈을 실은 종이비행기를 하늘 높이 날렸습니다.



4) [홍보기자단] 워크숍 참석 후기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 워크숍

작성자 : 김미화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 옷깃을 슬며시 여미게 되지만 이런 날씨가 활동력을 높여 주는 것 같아요.
11월 9일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야 할 활동이 몇 번 있었지만 시간이 맞질 않아 동참하지 못해 미안하면서 아쉬웠는데 이번 워크숍에는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정 때문에 시청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청 9층, 10층, 11층에 위치해 있어요.

기자단이 되니 평상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쳤을 것들도 눈여겨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시청 방문했을 때
시의회 버스를 봤는데
행사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저 버스를 타고
이동 하시나 봐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의장 김명율		 부의장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부위원장 분태자 위원: 서민식, 김경자, 박경태, 윤신애, 지혜준	 행정복지위원장 박상길 부위원장 윤산배 위원: 서민식, 우종삼, 김경민, 송미숙, 최정호, 김경식, 임우민, 서동환, 이연희	 경제건설위원장 나흥대 부위원장 박경태 위원: 김경구, 서동수, 실경민, 이한재, 김영자, 지혜준, 한경병, 임태용, 윤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미숙 부위원장 장왕세용 위원: 김경구, 김영민, 김경자, 서민식, 우종삼, 윤세자, 이연희	 문화특별위원장 김명식 부위원장 지혜준 위원: 박경태, 양태용, 윤세자, 윤신애, 최창호											
 김명구	 서동수	 서민식	 실경민	 우종삼	 이한재	 김영란	 김영자	 박경태	 윤신애	 지혜준	 한경병	 서동환	 양세용	 윤세자	 이연희

▶ 위원회별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특별위원회

시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군산의정과 시정을 알려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에는 23명의 시의원이 있고 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강사님의 블로그 강의를 듣고 설명에 따라 간단한 사진 편집 등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시의회 홍보기자단으로 기사의 중립과 공정성이 너무 중요하죠.

워크숍에 좀 늦게 참석한 관계로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챙겨 주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참석한 워크숍이어서인지 더욱 흥미롭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 이선옥

안녕하세요.

2023년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 이선옥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을이라고 물든던 단풍잎들이 후두둑 떨어지네요.

이제, 두툼한 외투를 꺼내서 입어야겠더라고요. 저도 룽패딩을 주섬주섬 꺼내 놓았답니다.^^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거예요.

저희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미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군산시의회를 시민들께 보다 다가가기 쉽고, 알고 싶고, 궁금하게 될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저희들의 교육을 위한 장을 고심끝에 마련하시어, 2023년 11월 9일 14시에 군산 시청 8층 전산교육실에서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시행하는 #군산시의회 #홍보기자단으로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새만금 대응 시민 논평

새만금관할권, 역전의 명수의 저력을 다시 보여줍니다

지난 9월 새만금 SOC예산 삭감 및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범시민 삭발식이 있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여 필자도 당연히 참여하였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민대표인 문남철·박충기·이희풍·김용화씨도 삭발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던 것은 다 군산의 새만금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군산은 새만금과 떼레야 떼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첫 구상은 1971년 군산시의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갯벌을 매립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에서 시작됐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라는 찬사 속에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군산은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4만 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관할구역을 포기하고, 어업권 상실 등 지역경제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만금 사업과 신항 건설에 적극 협력해 왔다. 하지만 김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 군산시민들은 떳떳하게 새만금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으로 대형 선박을 대기 어려운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추진됐고, 해당 공유 수면을 120년 동안 군산에서 관할해 왔다. 그러나 김제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것도 모자라 방조제 외측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 또한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만금의 미래를 가로막는 무염지욕(無厭之慾)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민은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다.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등에 김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모여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장 **이래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삭발투쟁뿐 아니라 전북도청, 군산새만금신항, 정부세종청사 등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를 주관하면서 전라북도의 무책임을 성토했고 전북도지사는 관할권 분쟁 중재 및 전북의 통합 및 상생 방안을 도민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해왔다. 군산 시민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도지사는 한번을 응답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의 대표가 전라북도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현장에서 만난 여러 시민들은 2021년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의 혼란이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혹여라도 이번 중분위 결정이 잘못될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전라북도의 방관과 김제의 관할권 분쟁 조장 속에서 새만금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다.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역전의 명수, ‘군산’의 시민이기 때문이다.

군산만의 저력으로 더이상 군산 땅을 빼기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여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다시 써나갈 것이다. 

(기고일 : 2023. 10. 31.)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기적인 소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김제와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에 새만금의 성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전라북도는 외부적으로는 새만금 SOC 예산 약 78%가 삭감되었고 또한 내부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으로 인해 내우외환에 처해있다. 하지만 도의 현재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도지사의 리더십은 보이기는커녕, 불통과 무능한 행정력만을 내보이며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2축도로를 본인 관할로 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끝을 알 수 없는 분쟁에 불을 붙였다.

그 이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이 중분위에 상정되어 줄줄이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에 따른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도민들은 이 숨막히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다.

도내 지자체 간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격해지면서, 새만금이 점차 분쟁의 땅으로 외부에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도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만성적 분쟁지역이 된다면,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발전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사항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군산시의회의 전라북도 관할권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촉구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중재할 사항이 아닌,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줄 사항”이라며 도내 내부 갈등에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문화체육분과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지회장 **황대욱**

이에 동조나 하듯이 군산시의회의 중재 촉구에 대해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하는 마당에 어떤 포지션을 놓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관할권 문제해결에 손을 놓은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한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은 10월 24일 이뤄진 전북도 국감에서 “관할권은 나몰라라 하는 책임 떠넘기기 리더십”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전라북도는 도내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와 책무가 있음에도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커녕, 공감하기 어려운 언론플레이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금 새만금은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위기에서도 소지역주의를 앞세운 갈등은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제라도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협력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전북도와 양 시군은 다시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분산된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김제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새만금 행정구역 조속 결정은 새만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잠시 접어두고 새만금 3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나아가야 한다.

(기고일 : 2023. 11. 03.)

전라북도지사, 지역소멸 위기에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라

얼마 전 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통계청이 가임 연령 여성 대비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전북지역 지수는 0.46으로 '위험 진입' 단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전주와 군산, 익산도 '소멸 주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위험 진입(4단계)은 김제(0.21), 정읍(0.24), 남원(0.25), 완주(0.39) 등이고 고위험(5단계)은 진안(0.15), 고창·장수(0.16), 임실·순창·부안·무주(0.17)로 전북의 인구 감소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지역의 절반이 이미 위험단계에 들어선 만큼 관련 대책 등 여러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인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멈추고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관할권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출범이나 할 수 있을까?

전라북도지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3개 시·군이 협약을 한다면 지역에 굉장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만 했을 뿐 새만금 3개 시군의 구체적 화합 방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왜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에 대해 공론화조차도 하지 않는 것일까. 새만금 3개 시군의 협치와 소통은 물론이고 상생의 기본인 군산과 김제 간 첨예한 관할권 분쟁조차 외면하여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도 말이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장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희**

정부에서 관할권 갈등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특별지자체 당사자인 군산·김제의 갈등을 간과해서는 안된 것이다.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의 방관이 아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와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김제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건의문 전달 및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에 참석하여 전라북도지사의 김제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중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새만금 3개 시군 상생 방안 마련은 군산만 잘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곧 전북의 위기이다. 생활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전북이 발전하려면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새만금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70만 명의 유발인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누빌 내 아이의 미래, 내 손주의 미래를 그려보자. 전라북도지사는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관련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기고일 : 2023. 11. 09.)

떨레야 떨 수 없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새만금 예산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지난 7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전북도민 5,000여 명이 “국가사업이자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뚝뚝 뭉쳐 예산 복원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다. 더군다나 향후 2~3년 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군산 새만금신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지구 등 내부개발과 같은 사업들을 포함하여 부처 요구액의 78%를 삭감하고 고작 22%만 반영했다니 정부가 ‘새만금 빅픽처’를 그린다는 게 고작 새만금 예산을 가위질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예정대로라면 5만t급 2선석 부두공사를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2026년 우선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예산이 삭감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니 군산시민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관할권 쟁송을 벌이고 있는 김제가 이제는 군산새만금 신항까지 본인의 관할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전라북도는 관할권 중재를 외면하고 있어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사매몰로 군산항의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선박 입출항이 불가하기에 향후 새만금산단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물동량 수송을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더군다나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 관할의 공유수면을 국가에 양보하는 등 군산시 어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삶의 터전과 생업을 빼앗기다시피 한 군산시 어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지만 새만금이라는 대업 앞에 희생을 감수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산시민의 희생을 왜 김제에서 보상받으려 하는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군산시수협어촌계협의회회장 **심명수**

또한 최근 군산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명예연구위원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One Port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가 상이할 경우, 항만별 화물유치를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 등 배후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되고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별도로 이루어져 항만 물동량 추정과정에 있어서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 이용 물동량 규모에 있어서 군산시 소재 국가·지방 산단, 새만금 산단 등이 김제의 복합개발용지, 농생명단지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타의 사안을 감안해도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은 한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맞으며, 특히 사업 목적, 물동량 규모 등을 보더라도 김제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은 터무니 없지 않은가 싶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이 회복될 때까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새만금 사업 예산부터 원상복구해야 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김제시의회는 중단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이 있다. 오래 묵은 원한이 있는 사이라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는 단결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하물며 새만금과 전북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가 우선인 작금의 사태에도 당장의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관할권 잠정중단 제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는 관할권 분쟁이 군산·김제 간, 양 당사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앞두고 새만금을 둘러싼 해묵은 반목과 대립을 중재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최대 위기에 도지사는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기고일 : 2023. 11. 10.)

위대한 시민 여러분, 더 위대한 군산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올 한해,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와 새만금을 둘러싼 최대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거친 풍랑에 맞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뭉치면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해졌고, 군산 발전을 위한 사명감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대내외적인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 덕분이었습니다. ‘군산시민은 역시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고, 우리 군산시의회는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했기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위기 때마다 저력을 발휘하는 역전의 명수, 군산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새만금 사수는 물론 의정에서도 남다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검증을 철저히 했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보자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대었습니다.

또한 지난 60년 만에 역대급 물폭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또다시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수해복구는 물론이고 군산의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지정·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9대 군산시의회가 때로는 집행부를 선도하기도 하면서 지역 현안과 문제해결에 고심한 성과는 39건 성명서 및 결의·건의안, 103건의 5분발언, 8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발한 군산시의회의 활동은 위대한 군산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군산시민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김제의 ‘선 소유권’ 주장과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지만 우리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은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 더 굳게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왔습니다.

이는 당초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선 개발, 후 행정구역’원칙에 어긋나며,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 지연과 전라북도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었기 때문에 분쟁조장 행위를 멈춰 달라고 목청 높여 외쳐 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대로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예산의 대폭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가 감행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언론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유례없는 위기의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이 왜곡되기도 하여 군산이 일제 최대 특혜도시라는 김제의 역사편혜 자행과 정치적 행위로 매도하는 전라북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산시민은 이런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산 땅 새만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고, 새만금 주인공으로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주인 의식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붙어닥친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새만금 개발이 정상화 될 때까지 관할권 결정을 잠정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만금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는 군산 땅을 지켜내고 관할권 분쟁으로 얼룩진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구해내기 위해 이른 봄 꽃샘추위에도, 폭염 아래 뜨거운 아스팔트에도, 매서운 한파 속 눈비에서도 꺾이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래범 공동위원장을 위시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등 시민 여러분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우리 땅을 지키려고 했던 열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가는 중에 군산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견하고 서로 간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응집된 결속력을 기반으로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나아갈 길을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군산의 새만금을 지켜낼 뿐 아니라 새만금 메가시티 등 3개 시군의 통합발전을 모색하여 전라북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군산시의회 또한 위기를 넘어 새만금과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 새만금의 중심이 되고 전라북도를 하나로 만드는 선구자가 될 ‘더 위대한 군산’을 이루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이환위리 以患爲利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듭을 이르는 말.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사수와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



군산영웅

군산새만금신항

-누가 주인인가-



군산시의회



발간등록번호

77-4670037-000001-09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군산시의회**